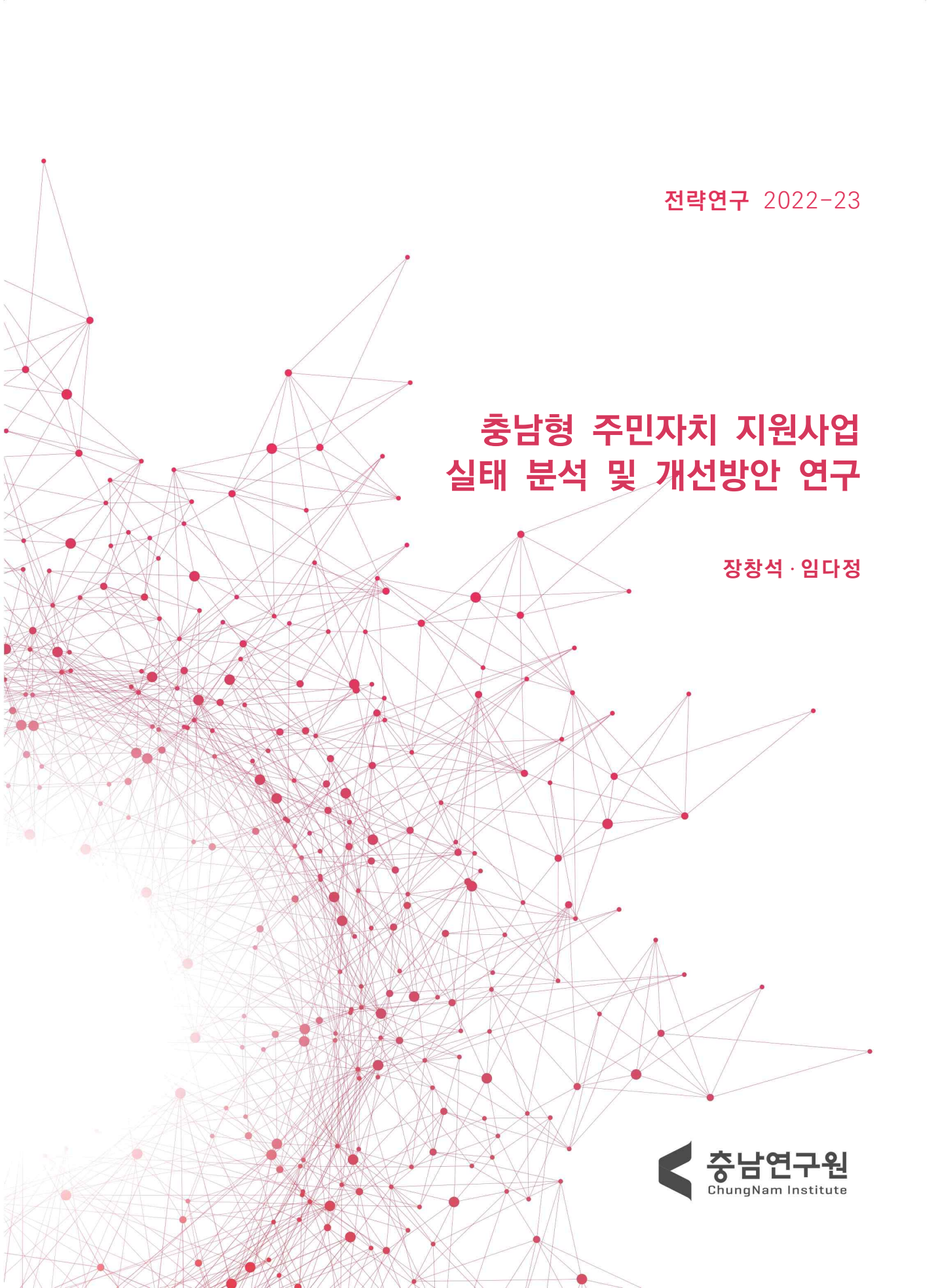




전략연구 2022-23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장창석 · 임다정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 수행체계	7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정책동향	8
1. 주민자치회 관련 이론	8
1) 주민자치의 정의	8
2)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11
2.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	13
3.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	18
1) 충남형 주민자치회	18
2)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	27
4. 선행연구 검토	42
1) 선행연구의 검토	4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3
 제3장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실태 분석	45
1.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현황 및 분석	46
1)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현황	46
2) 단계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분석	49
3) 연차별 추진 현황 분석	63
2.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인식 분석	70
1) 인식조사 개요	70
2) 인식조사 결과 분석	73

제4장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개선방안	111
1. 제도적 측면	111
1) 중장기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계획 마련	111
2) 주민자치회 지원 적정 성과지표 체계 마련	112
3) 지속적 예산지원과 집행의 유연성 확보	112
4) 동네자치 공동체의 지속적 발굴	113
2. 운영적 측면	114
1) 도, 시·군 협력강화	114
2) 주민자치회 중간지원 조직의 운영 및 활용	114
3) 주민자치회 지역사례에 대한 공유 플랫폼 운영	115
4) 동네자치 공동체의 지속적 발굴	115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16
참고문헌	118

표 목 차

〈표 1〉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차이점	15
〈표 2〉 중앙정부 주민자치회 모형 비교	17
〈표 3〉 주민자치회 유형별 비교(행안부형-충남형)	21
〈표 4〉 국내 주민자치회 시범선정 및 전환현황	23
〈표 5〉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4
〈표 6〉 서울형 주민자치회 특징	29
〈표 7〉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요 활동 및 지원사업	30
〈표 8〉 수원형 주민자치 조직 및 주요내용	32
〈표 9〉 마을 자치계획의 구성	33
〈표 10〉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 내용	33
〈표 11〉 광주형 주민자치회 사무국 구성	34
〈표 12〉 지역특성에 따른 경기도 주민자치회 모델	37
〈표 13〉 주거특성에 따른 경기도 주민자치회 모델	37
〈표 14〉 세종형 주민자치 조직 및 주요내용	40
〈표 15〉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5대 분야 12개 실행과제	41
〈표 16〉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년도별 예산 현황	48
〈표 17〉 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사업 예산 현황	49
〈표 18〉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사업 주요내용	50
〈표 19〉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주민자치회 전환 현황	50
〈표 20〉 충청남도 주민자치 시범공동체 현황	51
〈표 21〉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현황	53
〈표 22〉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 현황	54
〈표 23〉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	54
〈표 24〉 년도별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55
〈표 25〉 충남형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현황	55
〈표 26〉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현황(년도별)	56
〈표 27〉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지원 예산 현황	57
〈표 28〉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 지원 예산 현황	59

〈표 29〉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 사업 추진 현황	59
〈표 30〉 공주시 개방형 읍·면·동장 임기내 주요 사업 계획	61
〈표 31〉 당진시 개방형 읍·면·동장 임기내 주요 사업 계획	62
〈표 32〉 주민참여 혁신모델 현황 분석 기준표	64
〈표 33〉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분석(2018년 지원)	65
〈표 34〉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분석(2019년 지원)	66
〈표 35〉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분석(2020년 지원)	67
〈표 36〉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분석(2021년 지원)	68
〈표 37〉 연도별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비교	68
〈표 38〉 연차별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비교	69
〈표 39〉 조사 설문문항 구성	72
〈표 40〉 인구통계학적 특성	74
〈표 41〉 주민자치회 일반적 인식정도 평균 비교	76
〈표 42〉 주민자치회의 성격 인식 빈도분석 결과	77
〈표 43〉 주민자치회의 성격과 관계	78
〈표 44〉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 빈도분석 결과	79
〈표 45〉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와 관계	80
〈표 46〉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 빈도분석 결과	81
〈표 47〉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과 관계	82
〈표 48〉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빈도분석 결과	83
〈표 49〉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관계	84
〈표 50〉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FGI 결과	86
〈표 51〉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인식 비교	88
〈표 52〉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 빈도분석	89
〈표 53〉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과 관계	90
〈표 54〉 주민자치 혁신모델 사업 만족도 인식 비교	92
〈표 55〉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요 사업 만족도 인식 비교	93
〈표 56〉 충남형 주민자치회 발굴·확산 주요 정책 만족도 비교	95
〈표 57〉 개방형 읍·면·동장제도 인식 정도	96
〈표 58〉 개방형 읍·면·동장제도 진단 및 평가	97
〈표 59〉 개방형 읍·면·동장제도 만족도	98

〈표 60〉	개방형 읍·면·동장제도 확대 인식	98
〈표 61〉	개방형 읍·면·동장제 향후 추진 방향	98
〈표 62〉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 빈도분석	99
〈표 63〉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과 관계	100
〈표 64〉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 빈도분석	101
〈표 65〉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과 관계	102
〈표 66〉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 빈도분석	103
〈표 67〉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과 관계	104
〈표 68〉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 빈도분석	105
〈표 69〉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과 관계	106
〈표 70〉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 빈도분석	107
〈표 71〉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과 관계	108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및 주요내용	7
[그림 2]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기본 모델	16
[그림 3] 충남형 주민자치회 기본 모형	19
[그림 4]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체제도	28
[그림 5] 광주형 주민자치회 기본모형	35
[그림 6]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기본 모형	39
[그림 7] 주민자치회 일반적 인식정도 평균 비교도	76
[그림 8] 주민자치회의 성격 인식 빈도분석 결과도	77
[그림 9] 주민자치회의 성격과 관계도	78
[그림 10]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 빈도분석 결과도	79
[그림 11]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와 관계도	80
[그림 12]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 빈도분석 결과도	81
[그림 13]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과 관계	83
[그림 1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빈도분석 결과도	84
[그림 15]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관계도	85
[그림 16]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인식 비교도	88
[그림 17]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 빈도분석도	89
[그림 18]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과 관계도	91
[그림 19] 주민자치 혁신모델 사업 만족도 인식 비교도	92
[그림 20]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요 사업 만족도 인식 비교도	94
[그림 21] 충남형 주민자치회 발굴·확산 주요 정책 만족도 비교도	95
[그림 22]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 빈도분석도	99
[그림 23]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과 관계	100
[그림 24]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 빈도분석	101
[그림 25]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과 관계도	102
[그림 26]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 빈도분석	103
[그림 27]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과 관계	104
[그림 28]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 빈도분석	105

[그림 29]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과 관계	106
[그림 30]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 빈도분석	107
[그림 31]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과 관계	108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실시과정에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으로부터의 상향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논의 중 주민자치의 도입과 발전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의 성공적 추진과 안착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원리이다(유수동·전성훈, 20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건국헌법의 제8장 지방자치(9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표되면서 확립되었다. 이후 한국전쟁, 군사정부에 의한 중단이 지속되다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기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었다. 이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성 인식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변화 노력이 추진되었다. 1991년 민선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1995년 지자체 수장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면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지만, 분권개혁이나 자치의 발전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1999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일선 지방행정조직의 기능전환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여유향간을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자치의식,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여유향간을 활용한 문화 복지프로그램 제공에만 그 역할이 활용되고 있으며, 주민자치를 위해 구성된 주민자치 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로써의 역할이 주로 수행되어 주민참여 부족과 주민요구 반영 소홀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민자치기구의 제도적·운영적 한계에 대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행정주도의 주민자치기구에서 주민중심의 주민자치기구로써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에서 추진되었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전환이나 주민자치회의 신설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지금까지 시행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미흡한 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제도를 만들었고, 전국 읍·면·동중 시범운영 대상을 선별하여 운영하고 있다(최상현, 2014). 이러한 변화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대도 많았으나 시민사회의 성숙이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주민자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이 정책적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지방정부나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효과나 주민자치의 실현은 미흡하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 핵심 요인인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는 다르게, 2020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자치조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운영의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며, 시범실시 단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정부정책의 변화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주민주권의 강화, 주민참여 요구 증대 등의 시대적 변화와 도정 참여에 대한 도민 열망에 맞춰 주민참여 실질화 방안 필요하다는데 정책방향을 두고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사업들을 시행중이다. 2018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꾸준히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체자치가 주민자치보다 우선되는 현실에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4년간의 효과성 및 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의 보완과 제도적 변화, 운영 방향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충청남도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현재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인식의 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 재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의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정책, 제도들과 단계별(4단계, 예비·도입·정착·확산)로 운영중인 충청남도의 주민자치 지원 사업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실태평가와 경과 비교, 주민자치회 구성원 및 관계자 대상 인식분석, 의견수렴을 통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충남형 주민자치사업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민자치회 본연의 역할은 행정의 자문이 아닌 지역 민주주의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모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질적 권한을 담아내는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할 재정립과 활성화 방향성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대상 범위

본 연구는 충남형 주민자치를 운영중인 충남도의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자 한다. 대상 사업들은 2021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중점대상으로 하되, 비교대상으로 과거 4년간(2018년~2021년)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2) 시간 범위

본 연구의 시간 범위의 기준년도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분석 중점대상 시점인 2021년이다. 2021년말을 기준으로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기존의 제도를 검토하고 각종 통계 자료 등은 가급적 최근 자료를 인용하고자 한다. 또한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2022년 새롭게 시작되는 신정부, 민선8기 주민자치회 정책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3) 내용 범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이를 기초로 역할 재정립과 활성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주민자치의 큰 틀안에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에 대한 개념과 의의 등 이론적 검토와 주민자치 관련 법제도 변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및 지침 등 제도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의 흐름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 및 현황 분석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타자치 단체의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방식, 역할, 예산지원, 수행사업 등 주민자치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실태 및 현황 조사하고자 한다. 이론적 조사, 충청남도 현황,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종합 정리하여 성과 평가 및 분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자치회 참여위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인지도, 성과인식, 주민자치회의 향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공무원,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평가나 인식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 진단과 문제점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의 종합적 평가와 과제 도출을 통하여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변화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확장 가능성 검토와 충남형 주민자치회 역할 재정립을 통한 운영의 개선 방안과 발전 방안 제시하여 충청남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2)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대상과 개념 정립에 활용한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의 특성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관련 논의의 변화와 타 자치단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신정부 및 민선8기 주민자치 관련 내용들에 대한 정리 분석하였다.

(2) 조사표 조사

정형화된 조사표를 활용하여 충청남도내 주민자치회 지원 제도, 구성 및 운영, 지원,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사 실시하여,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3) 설문조사 및 워크숍(인터뷰)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사업수행 단계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 분석을 위한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충남도가 추진해야할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활용하고자 하였다.

3. 연구 수행체계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충청남도과 타 자치단체의 주민 자치회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갈등관리 과정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흐름도		주요내용	연구방법
제1장	·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 이론적 검토 및 정책동향	·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필요성 · 주민자치회 정책 변화 · 선행 연구 검토 및 사례조사	· 문헌조사
	↓		
제3장	·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실태 분석	·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현황 및 추진 실태 분석 ·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인식 분석	· 조사표 조사 · 설문조사 · 인터뷰 조사
	↓		
제4장	·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개선방안	·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의 방향성 설정 ·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개선 방안	
	↓		
제5장	·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및 주요내용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정책동향

1. 주민자치회 관련 이론

1) 주민자치의 정의

주민자치는 주민과 자치로서 구성된 단어이다. 자치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로서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는 특정지역으로서의 지방이 또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림을 의미한다(김병준, 2011).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민자치라는 용어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에 대한 관심속에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또한 자치는 최근 동네자치, 마을자치, 풀뿌리자치, 생활자치 등의 용어로 불리면서 비교적 작은 단위에서 주민사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 주민 참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과 문제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활동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와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된다.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측면에서 분권을 강조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이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측면에서 참여를 강조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할 수 있다(김필두, 2014). 즉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법인체인 시·도 혹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 안에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를 두고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 지역안의 현안과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다(김필두, 2013).

주민자치는 자치분권으로 이양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이 잘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며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민자치는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지역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민주성을 띠어야 한다는 이념이 강조된 것이다(안철현, 2017).

학문적 관점의 정의를 살펴보면 곽현근(2015)은 주민자치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주민들 사이의 유대의 토대위에 집합적 역량을 구축한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또는 정치행정과정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행위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이들에게 주민의 의사나 요구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여 주민의 의사가 지역의 정책결정에 반영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된다(김필두, 2013).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체자치’에서 실질적인 권한행사의 주체는 지방의회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권한행사 주체는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김필두, 2014).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행정에 참여함을 특징으로 하는 자치행정, 즉 시민의 자치행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자치단체 관련 사업에서 주민자치는 주요목표 또는 지향점의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김상민, 2016). 특정 지역의 문제해결 혹은 의제형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강조는 통치조직으로서의 정부가 아닌 통치과정 또는 통치방식의 중요성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는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직결된다(곽현근, 2015).

주민자치의 목적은 지역 내의 사무가 처리되는 방식이 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하고, 지역의 사무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정치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여 지방 정치권력의 행사가 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자치는 단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 이상이다(박영득 외, 2019).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반 행동에 나설 때 이루어진다(김필두 외, 2014).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이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곽현근, 2015). 지방자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지방자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 단위에서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주민자치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해진다(윤영근 외, 2018).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내의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참여하고 협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해결이 아닌 동네나 공동체 등 집합되거나 조직된 형태의 집단적 행태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행태들은 민주주의의 담론 차원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정치개혁만으로는 민주성결함을 치유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대안적 민주주의의 도입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넓은 의미에서의 주민참여와 과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동네나 공동체 같은 작은 단위에서의 주민참여 모습과 연계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주민자치는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단순한 개인수준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집합적 또는 집단적 행위의 의미를 내포한다(곽현근, 2015).

주민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지역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주민주권에 따른 것이다(이병렬외, 2015). 주민들이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체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최근 우리사회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제도로 주민자치가 강조되었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자치기구로 주민자치회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주민과 지역행정과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행정조직에 대해 더 큰 기대를 갖는 모순과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자기결정권에 따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근린생활기능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써의 주민자치회가 필요하게 되었다(신미애, 2018). 지역사회는 능동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근린자치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자치에 대한 학습기회를 부여하여 자치역량의 강화, 지방자치와 주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자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최근열, 2014).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이념에 따라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주변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웃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며,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네, 지역의 공동체이며 자치적으로 조직된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동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주민자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원칙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순수한 주민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 제28조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지원하는 행정보조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기구인 동시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일선행정기구로서의 2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필두, 2014).

주민의 자치조직으로써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지방의회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능면에서는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로써 지역문제해결에 노력하고 가지고 있는 지위는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내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정책결정을 수행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자,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지역문제해결을 함께 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실천적 활동 측면에서 지역의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제안, 심의, 의결 등의 활동을 하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증진과 대안의 탐색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인 관심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자치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참여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읍·면·동의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소통을 통한 공유, 공론화 등을 통해 해결을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의 증진과 참여를 위한 과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소통과 협력이 단절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주민들과의 접촉을 빈번하게 하고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참여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지역 내 주민의 대표기구로써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환경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수단들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등 내부 환경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할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 등 외부환경이다.

2. 주민자치 관련 정책

(1)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도입된 것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다. 주민자치센터는 시·군·구청에 의한 광역적,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읍·면·동의 일반 행정기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도입되었다(박영득 외, 2019). 특히 읍·면·동사무소는 대민행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문화, 복지기능에 대한 요구는 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행정조직 개편의 내용은 읍·면·동사무소의 인력을 민원과 사회복지 중심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지와 여가기능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속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다(최상현, 2016).

주민자치센터에 부여된 기능은 ① 지역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적 방재활동에 나서는 등 주민자치 ② 지역에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동호회, 생활체육, 전시회 등 문화 및 여가활동 ③ 시민교육, 자원봉사, 공동체교육, 노인교실 등 교육 및 봉사 서비스 기능 ④ 주민회의실, 정보센터, 자원재활용센터,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등 주민의 편익증진 기능 ⑤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지역복지 기능 ⑥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활동 등 지역사회 진흥 등의 여섯 가지 기능이 제시되었다(오수길, 2014).

보다 간단한 분류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여가기능과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사회를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자치기능 두 가지 기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와 이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활동의 근거지로 기능하기보다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능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문상덕, 2017; 이정석, 2015). 다시 말해 주민자치를 수행하는 중심축으로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하였으나 주민자치기능보다는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라는 성격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읍·면·동장 자문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단체라기보다는 마을 유지들의 친목단체거나, 읍·면·동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윤영근, 2018).

(2) 주민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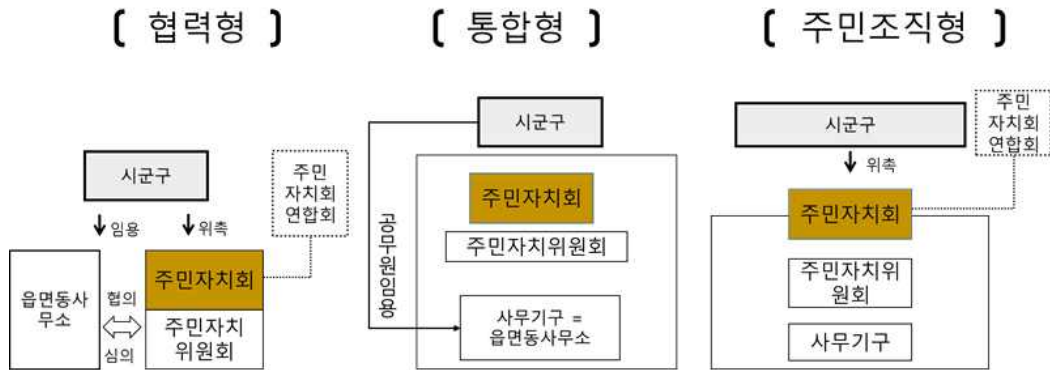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입 이후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제도를 추진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 보다 더 독립적이며 자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책설계와 도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권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 약 10여년의 기간동안 주민자치 도입기를 거쳐 일정 부문 확보된 주민자치 역량을 보다 강화·확대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개혁의 일환이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모집하여 20~30명 규모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읍면동 행정예에 대한 사전 협의, 위탁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 수행기능을 부여하였다. 사전협의 업무는 읍면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혐오시설 설치 주변 주민간 의견 수렴 등이고, 위탁업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원·공중 화장실 등 공공시설 관리 등이다. 주민자치 고유 업무는 마을 소식지 간, 자율방범 및 안전 귀가활동 등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마련방안도 강구하도록 하였다.

〈표 1〉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차이점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상	-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 주민자치 협의·실행기구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9조(행안부 승인)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기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결정 -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 주민자치 기능, 지방정부위임·위탁사무처리 - 주민생활 관련 사항 협의 및 심의
위원구성	- 각급 기관, 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접수	- 일정 주민자치 관련 교육시간을 이수한 지역대표, 주민대표, 일반주민 등 비율 고려, 공개모집 후 공개추첨 (대표성 확보)
위촉권자	- 읍면동장	- 시장·군수
재정	- 읍면동 지원금, 프로그램 수강료 한정	- 자체재원인 사업(위탁)수익, 기부금, 보조금 등으로 운영
지방정부 관계	- (대부분) 읍면동 주도로 운영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정부는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후 특별법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주민자치 모델을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 3가지로 제안하였다.



[그림 2]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기본 모델

행정안전부는 3가지 모델 중 협력형 모델을 채택하여 2013년 7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이후 각 지역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으나, 주민자치회는 그동안의 안정적 절차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역별 주민자치회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기 구성에 정부에서 제안한 주민자치회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안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적인 특성과 주민참여도, 기타 여건을 반영한 지역 특화형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제안된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고려한 거버넌스 구축 모델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표 2〉 중앙정부 주민자치회 모형 비교

구 분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법적지위		민간기관 임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하부 행정기관 공공단체 (법적단체)	민간기관 임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독립된 주민자치기관
기능		행정 협의 기능 주민자치 기능	의결기능 읍면동 행정기능	주민자치 기능 전담 행정기능은 자치단체 수행
구성	회원	주민전체 (가구단위)	주민전체 (가구단위)	회원제(자발적 참여) 회원으로 주민총회 구성
	위원	민간인	공무원 (정무/별정직)	민간인
	사무 기구	주민 (공무원 파견요청 가능)	공무원	주민 (공무원 파견요청 가능)
민관 협력	읍면동 사무소	존치 (행정기능 유지)	전환 (주민자치회 사무기구)	폐지 (지자체가 직접수행)
	지자체 와의 관계	읍면동과 연계, 협력 (협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요구 등)	시군구의 하부 행정기관	시군구와 연계, 협력 (주민 의견제출 등)

3.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

1) 충남형 주민자치회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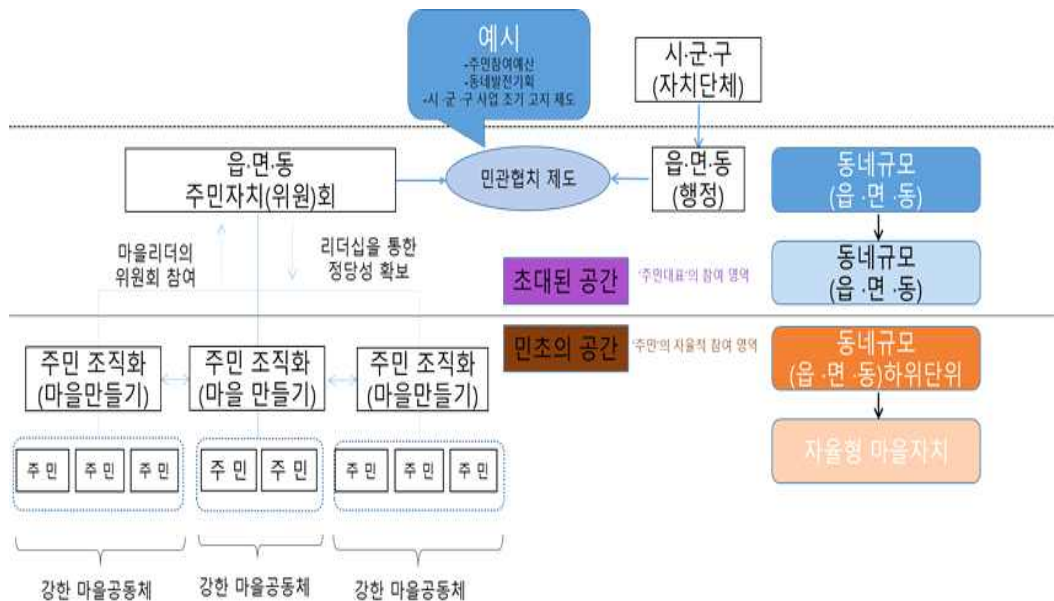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며, 주민의 참여는 행정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주민스스로가 지역 내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에 대한 욕구는 충청남도에서도 확산되고 있었고,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하려는 정부정책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충청남도는 주민자치의 확산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주민자치회 확대 및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참여의 실질화 방안 마련을 위해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추진하였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이전에 충남도에서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을 기추진중이었다. 충청남도에서는 민선6기 중점과제로 ‘충남형 동네자치 활성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유형의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를 발굴·육성하였다.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는 지역주민·활동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공동체로써 동네별 특성을 고려한 3가지 유형으로 모델이 추진되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2017년말까지 102개소의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주민자치위원회 41, 마을 47, 아파트 14)가 구성되었다.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는 동네자치의 추진을 통해 갈등해소, 주민화합, 소통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장기적 운영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점이 발생하여,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2)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

충청남도에서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의 운영과 한계 속에서 새로운 주민참여 형태를 고민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유형과 모형¹⁾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민자치를 주민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형과 지역공동체 대표가 정부의 행정과정에

참여하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형 두가지 유형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 마을만들기 리더들의 적극 참여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지역공동체 역할과 기능을 통해 지역에 보탬이 되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인식과 함께 주민으로부터의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원 제공, 지방정부 행정조직상으로도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독립부서를 설치 또는 강화,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공동체와 권력을 공유,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통합·운영 등 제도 도입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3] 충남형 주민자치회 기본 모형

1) 현장중심의 충남형 주민자치 유형개발과 시범 적용 연구(2015). 박현근 외.

충청남도는 제시된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기본모형과 유형을 적용하여,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확정하였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모형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자문기구로 기능했다면, 새로운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최고 의사 결정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읍·면·동장이 하던 위원 위촉 및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해 위상을 크게 높이고자 하였으며, 위원 정원은 기존 20~30명에서 30~50명으로 늘리고 구성 비율은 주민 대표 50%, 직능 대표 30%, 전문가 대표 20% 등으로 개선,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수준에 머물던 권한은 읍·면·동 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 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결정 및 실행 등으로 크게 넓혔다. 이에 더해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기획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실무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도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행안부형과 다르게 주민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표 3〉 주민자치회 유형별 비교(행안부형-충남형)

구분	주민자치회(행안부)	주민자치회(충남형)
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형태	▸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인원	▸ 20 ~ 30명 자율결정	▸ 30~50명 이내 자율결정
위원 임기	▸ 2년, 연임가능 ※ 시군 사정에 따라 자율결정	▸ 2년, 연임가능 ※ 시군 사정에 따라 자율결정
선정 방법	▸ 시장·군수 위촉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읍면동장 3, 이장협의회 3, 사회단체 추천 3) ▸ 지역대표(이통장추천, 10명 이내) + 주민대표(주민 공개모집, 10명 이내) + 직능대표(전문가 등 공개모집, 10명 이내)	▸ 시장·군수 위촉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내부위원 5, 읍면동장, 외부위원 4 中 시장군수 2, 시군의회위원장 2) - 서류심사, 면접병행 ▸ 주민대표(공모, 추천), 50%) + 직능대표(당연직, 30%) + 전문가대표(공개모집, 20%)
대표성	▸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기능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심의 ▸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총회(연1회, 주요사업계획결정)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 협의·심의 ▸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 지역 내 최고의사결정기구
재정	▸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보조금, 기부금 등 다양	▸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보조금, 기부금, 주민세 등 다양
지자체와 관계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 협력적 관계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 협력적 관계

(3) 충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충청남도에서는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충청남도 전체 읍·면·동 수는 207개이며, 이 중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2021년말 기준 약 49%인 102개소가 주민자치회를 운영중이다.

주민자치회의 전환과 운영은 2015년 5개소, 2018년 12개소, 2019년 45개소, 2020년 67개소, 2021년 102개소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02개소 중 충남형 34개소, 행안부형 91개소, 자율전환 30개소이다.

시·군별 주민자치회 개소수는 논산이 1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당진 14개소, 서천·홍성 6개소, 천안 5개소, 아산·4개소, 예산 3개소, 공주·서산·청양 각각 2개소, 보령·계룡·금산·태안 각각 1개소가 구성되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말 기준으로 광역도에서는 가장 높은 전환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며, 동일한 지원 조건에도 주민자치회 구성, 총회개최 등 시·군간 주민자치 활성화의 격차도 지역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국내 주민자치회 시범선정 및 전환현황

시도	읍면동	행안부 시범선정* (‘20. 12월 말 기준)	주민자치회 전환 (‘20. 12월 말 기준)	비율
계	3,487	626	497	14.3% (전국 평균)
서울	425	171	136	32.0%
부산	205	10	14	6.8%
대구	141	6	6	4.3%
인천	154	70	54	35.1%
광주	96	32	34	35.4%
대전	79	21	21	26.6%
울산	56	4	4	7.1%
세종	20	10	14	70.0%
경기	544	104	69	12.7%
강원	187	42	16	8.6%
충북	153	3	3	2.0%
충남	207	64	67	32.4%
전북	243	3	2	0.8%
전남	297	28	28	9.4%
경북	332	10	2	0.6%
경남	305	48	27	8.9%
제주	43	0	0	0.0%

* 2020. 12.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선정 결과 통보 기준

** 광역도 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비율이 가장 높음

〈표 5〉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시·군	읍·면·동	시범대상		자율 전환	최초 구성
		충남형	행안부		
합계	102개소	34	91	30	
천안 (5)	원성1동		2013		'13.12.
	성정1동	2018	2019		'18.11.
	풍세면	2019	2019		'19.09.
	성환읍	2019	2019		'19.09.
	백석동	2019	2019		'19.09
공주 (16)	반포면		2019		'13.12
	정안면	2020	2020		'20.07
	유구읍		2021	2021	'21.01
	이인면		2021	2021	'21.01
	탄천면		2021	2021	'21.01
	계룡면		2021	2021	'21.01
	의당면		2021	2021	'21.01
	우성면		2021	2021	'21.01
	사곡면		2021	2021	'21.01
	신풍면		2021	2021	'21.01
	중학동		2021	2021	'21.01
	웅진동		2021	2021	'21.01
	금학동	2021	2021		'21.01
	옥룡동		2021	2021	'21.01
	신관동		2021	2021	'21.01
	월송동		2021	2021	'21.01
보령 (2)	대천3동	2021			'21.06
	대천4동	2020	2020		'20.08
아산 (4)	탕정면		2013		'13.10
	배방읍		2015		'16.07.
	온양3동		2019		'20.01
	온양6동		2019		'19.06

시·군	읍·면·동	시범대상		자율 전환	최초 구성
		충남형	행안부		
서산 (15)	대산읍	2018	2019		'18.10.
	부석면	2019	2019		'19.09.
	인지면		2021	2021	'21.07.
	팔봉면		2021	2021	'21.07.
	지곡면		2021	2021	'21.07.
	성연면		2021	2021	'21.07.
	음암면		2021	2021	'21.07.
	운산면		2021	2021	'21.07.
	해미면		2021	2021	'21.07.
	고북면		2021	2021	'21.07.
	부춘동		2021	2021	'21.07.
	동문1동		2021	2021	'21.07.
	동문2동		2021	2021	'21.07.
	수석동		2021	2021	'21.07.
	석남동		2021	2021	'21.07.
논산 (15)	벌곡면		2013		'13.11.
	취암동		2020		'20.01.
	부창동		2020		'20.01.
	강경읍		2020		'20.01.
	성동면		2020		'20.01.
	광석면		2020		'20.01.
	상월면		2020		'20.01.
	부적면		2020		'20.01.
	연산면		2020		'20.01.
	가야곡면		2020		'20.01.
	은진면		2020		'20.01.
	채운면		2020		'20.01.
	연무읍			2020	'20.01.
	양촌면			2020	'20.01.
	노성면			2020	'20.01.
계룡 (2)	두마면	2021			'21.06
	신도안면	2020	2020		'20.07

시·군	읍·면·동	시범대상		자율 전환	최초 구성
		총남형	행안부		
당진 (14)	당진1동		2019		'20.05
	당진2동		2019		'20.05
	당진3동		2019		'20.05
	합덕읍		2019		'20.05
	송악읍	2021	2019		'20.05
	고대면		2019		'20.05
	석문면		2019		'20.05
	대호지면		2019		'20.05
	정미면		2019		'20.05
	우강면		2019		'20.05
	신평면		2019		'20.05
	송산면		2019		'20.05
	면천면		2019		'20.05
	순성면		2019		'20.05
금산	추부면	2019	2019		'19.07
부여 (4)	초촌면		2019		'13.12
	외산면	2018	2019		'18.10
	홍산면	2019	2019		'20.01
	내산면	2020	2020		'20.11
서천 (7)	서 면		2019		'14.05
	마산면	2018	2019		'18.11
	장항읍	2019	2019		'19.11
	비인면	2019	2019		'19.12
	문산면	2020	2019		'20.09
	한산면	2020	2020		'20.10
	화양면	2021			'21.06
청양 (4)	청양읍	2018	2019		'19.01
	정산면	2020	2020		'20.12
	청남면			2021	'21.01.
	운곡면	2021			'21.01.
홍성 (7)	홍동면	2019	2019		'19.11
	홍성읍		2019		'19.11
	광천읍		2019		'19.11
	홍북읍		2019		'19.11
	장곡면	2020	2020		'20.11
	결성면	2020	2020		'20.11
	구항면	2021			'21.06
예산 (4)	대흥면		2013		'13.12
	예산읍	2018	2019		'18.09
	덕산면		2019		'20.01
	신양면	2021			'21.06
태안 (2)	이원면	2021			'21.06
	원북면	2018	2019		'19.01

2)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

(1) 서울시 주민자치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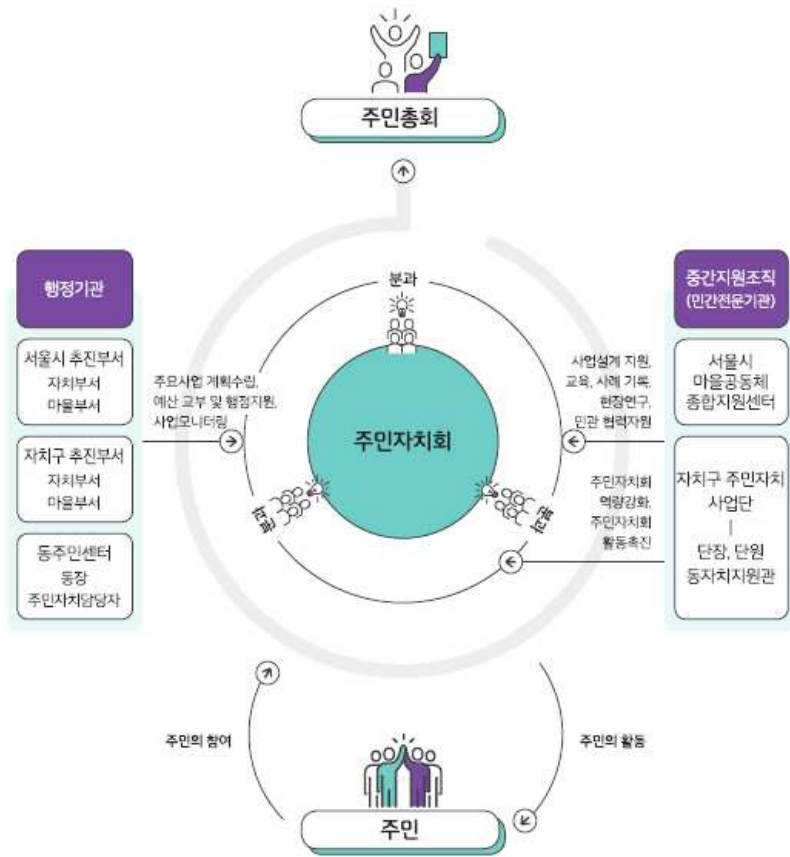
① 추진배경

서울시는 행정혁신과 주민참여를 통해 동 단위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 단위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타난 구성의 대표성 및 다양성 부족, 위원 역할 및 자율성 부족, 전문적인 주민자치 의식 및 역량 부족등의 문제점과 운영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인 주민자치회로 개편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비전은 동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개인이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전략은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사업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자치회를 신규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이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민주적인 참여문화, 민·관협력을 기본가치로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마을계획, 참여예산, 자원봉사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해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위한 플랫폼을 구상하였다.

② 운영 모형 및 특징

주민이 동 단위에서 직접 만드는 마을계획을 세웠으며, 4개 구 14개 동에서 1단계 사업으로 주민 평균 75.6명 참여해 주민주도의 마을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서 민관 협력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운영·결정하는 계획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형을 도출하였다(김홍주, 2018).

2)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2017~2020) 요약 정리



[그림 4]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체계도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주요 특징은 조직구성, 주민권한확대, 자치역량강화, 주민참여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표 6>과 같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주요권한은 자치계획 수립, 동 참여예산 제안권한, 행정사무 위·수탁권한, 그리고 행정사무 협의 권한 등이 있다. 자치계획의 수립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고려하는 권한을 말하며, 참여예산 제안은 참여예산의 편성 및 제안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고려, 행정사무의 위탁 및 수탁은 주민이 수행할 때 자치회관의 자율적 운영과 같이 보다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의 협의에 대한 사항은 동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개진, 감시, 그리고 평가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주민이 직접 실행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무는 주민에게 위탁하도록 하며 그 사무의 예로서 자치회관의 운영, 청소행정, 작은 도서관

운영,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협의사무의 경우 동장과 대등한 관계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등 기능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해 행정 사무를 결정·실행하도록 규정하는 골목길 가꾸기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이다.

〈표 6〉 서울형 주민자치회 특징

특 징	주요 내용
추첨을 통한 대표 주민조직 구성	- 주민자치회 정원 50명 확대(특정 성비 60%미만, 40대 이하 15%이상 구성)
	- 자치학교 이수자에 한해 추첨 후 선정(공정성, 개방성 확보를 위한 방안)
주민권한 확대	- 참여예산 사업 선정권한(예, 동 마을계획 등)
	- 행정사무 위탁 및 수탁권한(예, 자치회관 위탁 등)
	- 자치계획의 수립·실행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 구, 동의 지원체계 구축(예,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동자치지원단 등)
	- 자치와 마을 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의 통합(예,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등)
주민 참여 확장	- 주민에게 개방된 열린 분과 구성
	- 주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③ 주요 활동 및 지원사업

서울시는 주민자치회의 주요 전략으로 주민의 권한강화,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주민들의 자치활동 참여의 개방성 확보,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립하였다. 먼저 주민의 권한 강화를 위해 동지역사회 자치계획 수립 권한, 주민세(개인 균등) 징수분 사업선정 및 집행 권한, 행정사무 협의 및 위수탁 권한, 서울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권한 등을 부여 하였다.

또한 주민자치회 신규구성을 통해 주민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조직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자치학교 최소 6시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최종 위원 50인 선정하였다. 위원 선정시 성비 및 연령비율 고려하여 선발하였으며, 역할과 책임 있는 참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으로 위촉이 될 경우 주민자치회 운영목적과 방향, 세부 운영내규를 논의하는 워크숍을 통해 임원을 선출하한 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 후 주민들의 자치활동 참여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분과 중심 운영, 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다양한 분과구성, 위원이 아닌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분과 운영, 자치계획은 동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통하여 최종 의결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동 별 민관협력체계 구축하였으며, 자치구 단위 중간지원조직(자치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구성하여 자치구 상황에 맞는 주민자치회 지원, 동자치지원관 제도 운영에 따른 동 현장 중심 사업지원 등을 추진중이다.

〈표 7〉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요 활동 및 지원사업

특 징	주요 내용
주민의 대표성 확보	-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은 추첨을 통해 선정 -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작성 제출,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선정될 기회를 얻음 - 선정은 공개적 절차에 따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연령 및 성별에 맞춰 추첨으로 선정
주민의 개방성 확대	- 보다 열린 구조의 주민자치회를 위해 분과 활동 의지가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도록 개방 - 각 분과 영역에 자치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은 언제든지 관심을 가진 영역의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분과를 지원하고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주민공론장	- 주민자치회의 모든 사업 및 활동은 분과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됨 - 주민총회는 주민의 공론장 및 직접민주주의 장으로 주민자치활동과 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하고 매년 개최됨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과 동자치지원관	- 지원체계는 주민의 자치역량 성장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동단위의 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며,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은 민간기관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며 행정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 담당 - 즉, 동 자치지원관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마을단위의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며, 주민자치사업단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협의 조정역할을 하는 것임

출처 : 서울시 중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2019)

(2) 수원시 주민자치회³⁾

① 추진배경

수원시는 주민주권 도시의 도입 및 실행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마을만들기, 복지분야의 지역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치역량을 키우고 있다. 수원시의 특성에 맞는 주민주권 혹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의 운영모델 개발 및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주민자치를 위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② 주요내용 및 특징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마을만들기’와 ‘복지’ 기능을 더한 형태이다. 주민자치회는 2019년 8월 위촉되어 2년간의 임기로 시범 운영중이며, 주민자치회 위원은 총 240명으로 공개추천 60%, 동장 추천 40%로 선정되었으며, 8개 시범동에서 2019년 8월부터 2년간의 임기로 시범운영중이다. 수원형 주민자치 조직 및 주요내용은 <표 6>와 같다.

수원시의 경우 주민자치회는 동 심의기구(자치센터운영 자문·의결)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의 대표기구로써 마을자치계획 수립등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회 활동의 효율성과 기능강화를 위해 그 목표가 비슷한 주민협의체 운영 조례 및 마을 만들기 조례를 주민자치운영조직과 통·폐합하였다. 주민자치회는 안전, 복지, 환경과 관련해 지역별 관심이 높은 사업에 대해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의 권한, 지원의 규모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유도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및 지역주민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자치 기본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를 조례로 규정하고 재정적 안정을 위해 주민세를 주민자치사업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며, 주민세 인상과 병행,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적구성 다양화를 위해 공모방식 도입하였다.

3)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김홍주, 2018) 재정리

〈표 8〉 수원형 주민자치 조직 및 주요내용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대표성	- 지역유지 중심(대표성 미약)	- 주민대표기구(참여확대)
구성	- 25명 이내	- 30명 ~ 50명
위촉권자	- 동장	- 시장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동장추천	- 공개모집(60%) 공개추천 도입 동장추천(40%)
주요역할	· 동 자문기구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심의 - 동 행정업무 자문	· 동 주민자치기구 - 주민총회 개최 - 마을자치계획 수립 - 행정사무 수탁처리 - 주민세환원사업계획안, 주민참여예산사업, 계획안 수립
재정	- 동 예산지원 외에 별도 재원 없음	- 자체제원(수익·수탁사업 수입), 보조금, 기부금 등 다양
지자체와의 관계	- 대부분 동 주도로 운영	-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십 구축

③ 수원형 주민자치회 주요 사업

수원형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이 마을자원조사 등을 통해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에 상정, 주민이 결정하여 사업을 실행중이다. 사업은 크게 자체사업, 공모사업, 수탁사업, 참여형 예산사업 등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자치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행정과 주민간 신뢰관계의 증대, 동 주요 사업의 통합추진,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하여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제한적이나마 주민들의 참여 확대, 주민자치 인식 제고 등의 평가를 받고 있다. 송죽동의 경우 회의개최, 신규사업, 역동적 운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9〉 마을 자치계획의 구성

구 분	주요 내용
자체사업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공모사업	-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등 공모사업
수탁사업	-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마을관리소 등
참여형 예산사업	- 주민세 환원사업, 주민참여예산

〈표 10〉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요 내용

구 분	위촉 위원수	주요 사업
송죽동	23명 (남16,여7)	- 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 재능기부사업 - 송죽 행복드리미 행복나눔(CMS) 운동 - 어린이 공원 위탁관리 사업 추진 - 주민소통 문화공간조성 북카페 운영 등
행궁동	30명 (남17,여13)	- 행궁마을 안전지킴이 야간 자율방범 순찰 활동 - 행궁동 순라군 운영 - 자동차 없는 날 운영 - 시민자전거 대여소 운영 - 행궁동 골목마을 해설사 양성 운영

출처 : 월간 주민자치(2023.3.)

(3) 광주형 주민자치회⁴⁾

① 추진배경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을 5개 동에서 실시했지만, 기존 주민자치회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였다. 이에 2016년 1월부터 관련 부서,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TF를 구성하였다. 광주광역시는 협력형 모델을 수정 보완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 개발하였다.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광주

4)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방안 연구(이용환, 2019),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손정혁, 2020) 재정리

정신(민주, 평화, 자유, 정의)를 기본으로 주민참여와 소통, 신뢰, 평등의 생활자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비전은 생화자치 속 주민참여가 살아있는 광주 공동체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2016년 7월 5개 동을 선정해서 2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동에는 1차년도(2016.7~2017.6)에 시설비와 운영비 등 9천만 원을 균등 지원하였으며, 2차년도(2017.7~2018.6)에는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을 통해 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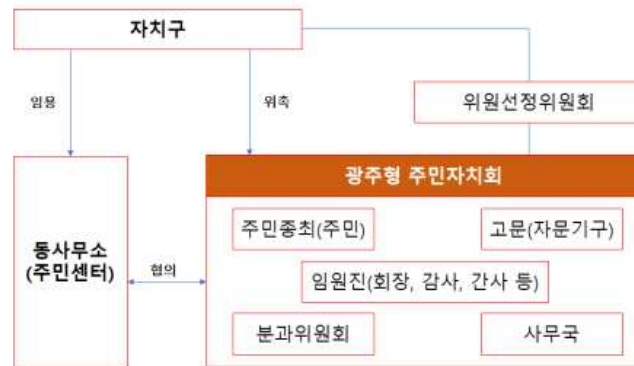
② 주요내용 및 특징

광주광역시 조례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민자치회의 자립적인 운영과 역량강화를 도모하였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사무국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정된 사무국장과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자원봉사자인 사무직원으로 구성하고, 실무능력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비수준의 수당을 제공하였다.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사항과 회칙에서 정한 업무들을 처리한다. 또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분과 위원회 사업을 총괄하며,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위탁 및 자치사업 발굴 등을 진행한다. 사무직원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문서·재무·회계 등 실무를 처리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관리, 총회·자치회·분과위 등 안전상정 및 회의자료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표 11〉 광주형 주민자치회 사무국 구성

직위	인원수	업무내용
사무국장 (간사)	1	- 주민자치회 위원 중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 - 주민자치회의 의결사항과 회칙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분과위원회 사업 총괄 - 마을발전계획 수립, 위탁 및 자치사업 발굴 등
사무직원 (자원봉사자)	1~2	-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자원봉사자를 회장이 임명 -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 담당 - 마을발전계획 수립, 총회/주민자치회/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등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집단의 참여를 보장해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위원 정수를 20~5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위원선정 이전에 지역공동체 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생단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해당 동의 다양한 주민단체와 계층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을 안내하고, 해당 분과위원회 설치를 권장하였다. 특히 분과위원을 구성할 때 아파트분과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주거형태가 아파트가 50%이상인 경우 아파트 단위의 자치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주민총회를 두고 있다. 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이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5] 광주형 주민자치회 기본모형

③ 주요사업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에서 행정사무 수탁권의 실질화를 구축하였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필수 위탁사무로 지정하였다. 이에 주민자치회가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유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절감, 불법 광고물정비 등 동 여건에 맞는 위임·위탁사무를 1건 이상 발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활동들은 주민들이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마을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광역시는 행정사무 수탁권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다른 주민자치 사무로는 마을신문 및 소식지 발간이 있다.

이는 주민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주민총화를 개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결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광주광역시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는 광주광역시 내 우수 주민자치 시범 동을 탐방하며 사례를 학습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 및 동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만든다. 또한 활동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 표창을 추진하는 것도 특징이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활성화 유공시상을 통하여 사기와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경기도형 주민자치회⁵⁾

① 배경

경기도는 경기도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주민 참여 제도를 강화하였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및 제도와 지원사항 등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정책수립을 제안하였다(이용환 외, 2019).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형 주민자치는 지역의 여건과 개성을 존중하여 획일적인 주민자치조직 유형에서 탈피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형(농어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APT형, 주택형,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형, APT와 주택 등 혼합형)의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단순히 형식적 자문역할이 아닌 대표성과 자치역량을 가진 실질적 자치기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② 주요 모델 및 특징

경기도형 주민자치는 지역의 여건과 개성을 존중하여 획일적인 주민자치조직 유형에서

5)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방안 연구(이용환, 2019) 요약 정리

탈피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형(농어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APT형, 주택형,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형, APT와 주택 등 혼합형)의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며, 단순히 형식적 자문역할이 아닌 대표성과 자치역량을 가진 실질적 자치기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여, 읍·면·동의 지형, 역사·문화, 지역 인프라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의 성격 및 활동 방향 등을 고려하였다.

〈표 12〉 지역특성에 따른 경기도 주민자치회 모델

구 분	특 성
농어촌형 주민자치회 모델	- 농촌지역은 지역적으로 경기북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연천군, 가평군 지역 등 군 지역이 기본적으로 해당됨 - 위 지역을 포함하여 군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주민자치회 구성이 가능
도시형 주민자치회 모델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 가능
도농복합형 주민자치회 모델	-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는 권역 중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자연보전권역 중심의 시·군지역과 경기 북부권역, 경기 남부 지역의 성장관리권역 해당 - 위 권역 이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도시편입 및 성장과정에서 주민자치회 구성 가능

〈표 13〉 주거특성에 따른 경기도 주민자치회 모델

구 분	특 성
APT형 주민자치회 모델	- 도시지역의 APT 단지를 중심으로 조직화 가능 - 도시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므로 위원선정, 사업선정에 민의를 반영하는 방법, 도시행정수요,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 검토 필요
주택형 주민자치회 모델	- 도시지역 중 비 아파트 도시지역이나 농촌중심 지역에서 조직화 가능 - 도시행정수요, 지역발전의 요구도를 반영하면서 직접적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발전을 논의하는 모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빌라)형 주민자치회 모델	- 도시지역 중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조직화 가능 - 지역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므로 도시행정수요,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하는 모델
혼합형(APT와 주택) 주민자치회 모델	- 주로 도시지역에서 조직화가 가능하지만, 읍지역이나 도농복합시에서도 주택형태별로 조직화 가능

③ 추진 방안

읍·면·동 단위 마을에서 노후지역을 개선하거나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들과 협의를 한다. 마을 내 도서관 혹은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하는 등 마을 운영 시에 주민들 권한이 대폭 강화되므로 주민자치회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경기도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자원 배분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가 요구되므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대표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홍보활동 강화로 대표성 확보, 자질 함양 및 역량 강화 교육·연수를 시행하고,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예산확보 등 지속화 전략 마련과 마을 단위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5) 세종형 주민자치회⁶⁾

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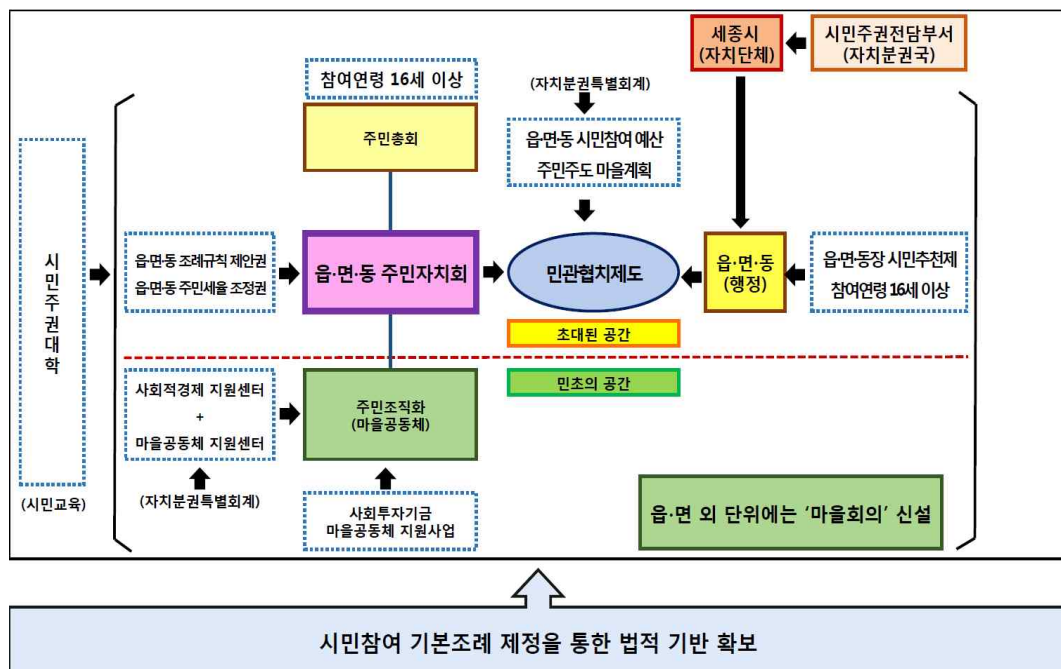
세종시는 2013년 부강면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처음 시작하였다. 2018년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로 안정적인 읍면동 예산 확보를 통해 주민자치회 활동 근거와 주민자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이 주인인 생활자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세종형 주민자치회는 16세부터 위원 선발이 가능하게 하여 청소년들도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100% 공개추첨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행정에 우호적인 위원 중심의 선발에서 위원 선정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켰다. 규모는 각 동별로 10~50명 이내로 두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읍·동은 1회만 연임가능하며, 면은 연임이 가능하다. 특히 연령·성·지역에 따라 균형 있게 선정 비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원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6) 세종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형 도출 및 운영방안 연구(김홍주, 2022) 요약 정리

② 주요내용 및 특징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수준으로 운영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구이며, 기존 주민자치회 업무에 주민총회, 마을계획, 예산협의회 업무, 주민숙원사업 등 자치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는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되는 지역에 리·통 단위 마을회 → 주민자치회 → 주민총회로 이어지는 마을의사결정 시스템의 제도화를 모색하였다. 운영체계도를 자세히 알아보면, 가장 먼저 읍·면지역의 리 마을회에서 마을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시민주권대학을 운영하며 읍·면지역의 마을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분과를 구성하여 읍·면·동 단위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하여 최종결정한다.

세종시의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기본 모형’은 주민자치회 조직 내부의 체계나 구조뿐 아니라 근리지역 단위에서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및 지역 맞춤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림 6]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기본 모형

③ 주요 특성

세종형 주민자치회는 2013년 부강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2021년 기준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하였다. 세종형 주민자치회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로 안정적인 읍면동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읍면동 예산협의 권으로 읍면동 사업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였다. 특히 위수탁 사무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주민자치회가 위탁해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높거나 자립기반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무를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립도서관, 시민 가로수 돌보미, 노인복지회관을 대상 사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기능은 마을계획 수립 과정에 중간지원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초기 주민자치회의 미숙한 경험을 단기간에 극복하였다.

특히 세종시 주민자치회 모형의 구현을 위하여 마을 조직, 마을 입법, 마을 재정, 마을 계획, 마을 경제 등 총 5대 분야 12개 실행과제를 추진하였다.

〈표 14〉 세종형 주민자치 조직 및 주요내용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상	-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 주민자치 협의 및 실행기구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세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 세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기능	- 주민자치사무 -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복지편익기능 수행)	- (주민자치사무) 주민총회, 마을계획수립, 마을축제, 마을소식지 발간 등 - (협의 및 자문사무) 소규모 숙원사업, 읍·면·동의 행정사무 등 협의 및 자문 - (수탁사무) 노인대학운영, 야간 자전거 순찰대 운영 등 시에서 위탁하는 사무추진

〈표 15〉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5대 분야 12개 실행과제

분 야	실행과제	성과 및 추진 일정
Ⅰ. 마을 조직	1.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 전(全) 읍면동(20개) 확대 완료('20.12)
	2. 주민자치회(리단위 마을회) 설치	- 전(全) 읍면동 전환 완료('21.3) - 마을회 설치 완료(255개 리) - 전(全)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21.8)
	3. 참여연령 16세로 확대	- 「시민참여 기본 조례」('18.11) 내용에 포함
Ⅱ. 마을 입법	4. 시민참여 기본 조례 운영	- 「시민참여 기본 조례」('18.11) 제정 - 제도 보완 및 조례 개정('21.7) - 시민주권회의·시민감동특위 운영('19.1~)
Ⅲ. 마을 재정	5. 읍면동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	- 시민참여 조례에 제안권 명시('18.11) - 시민참여율 제고를 위해대(對)시민홍보(매년)
Ⅳ. 마을 계획	6.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	- 「자치분권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18.11) - 운영지침 수립 및 직원순회교육('19.2~4) -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 확대('19년 기준 159억 → '22년 기준 184억)
Ⅴ. 마을 경제	7.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 「지방세법」개정안 국회 통과('21.12) - 「시세조례」개정 및 읍면동적용계획수립('22)

4.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와 평가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평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비교적 오랜기간 추진되어온 주민자치 센터,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연구들에 비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연구들은 적은 편이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방안 제시 등 제도의 활성화와 정착에 대한 연구가 다수이며, 주민자치회의 운영 실태나 평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드물었다.

주민자치회에 관한 선행연구로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심익섭(2012), 김찬동(2014)은 주민자치회 제도화 연구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신윤창 외(2017)는 주민자치회 도입의 문제점을 위원구성, 사무수행, 재정지원 측면에서 분석하고 세가지 측면의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제도와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별 연구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평가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필두(2014)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주요 성과로는 공무원과 주민의 주민자치 인식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 제고, 주민의 자치 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등을 분석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주민자치회 모델(협력형)의 적정성,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방식,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과 역량 부족, 주민자치회의 사업 범위와 내용의 불명확,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재원 조달방안 불투명 등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분을 법과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 상근직원을 배치,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기능 부여를 위한 읍면동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주민자치회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우선적으로 위탁과 추가로 주민자치회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 발굴 등을 발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최근열(2014)은 주민자치회의 이론적 배경, 시범실시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민자치회 발전 과제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성격, 구조, 구성과 운영, 사업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성격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들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중 선택적 운영 보장을 제안하였으며, 주민자치회 구조 측면에서 먼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세 가지 모델 중 협력형 모델 이외에 통합형, 주민조직형 주민자치회 모델도 시범실시를 하여 읍면동별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는 노력을 제안하였다.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에도 주민대표성, 자발성 및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하며,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 되면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 까지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 행·재정적 지원과 관심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측면에서 우선 주민자치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다른 다양한 주민조직(자생조직 및 단체)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자치회 전용공간 확보와 유급사무원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종수 외(2015)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성격, 주민자치회 구조,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사업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를 토대로 그 활성화 방안과 과제를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개별연구 보다는 기관 차원의 주민자치회 성과 평가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2020)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와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연구원(2019), 대전세종연구원(2019), 광주광역시(2019)에서도 주민자치회 성과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협력형 모델에서 진보된 형태의 지역 맞춤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공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은 주민자치의 수행 주체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이고, 이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객관적 평가보다는 주민자치회 운영 현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해 이런점들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객관적 지표에 의해 주민자치회를 평가한 연구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개별지표들로 성과평가를 연구하고 있어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성과평가에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의 여건과 실태를 반영한 성과 평가 및 활성화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 대한 실태분석과 객관적 평가를 위해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충남형 주민자치에 대한 여건과 성과 평가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겠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변화,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충청남도 현실에 부합하는 연계가능한 주민자치회 전략 방안을 제안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제3장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실태 분석

본 장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지원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실태 분석을 위하여 크게 두가지로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주민인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분석에서는 충남도의 추진전략인 주민자치회 역량 단계별(4단계) 맞춤형 지원 중 예비단계, 도입단계, 정착단계의 사업들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예비단계(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도입단계(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정착단계(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지원에 대한 방향성, 예산지원,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현황과 분석을 실시하고, 조사표 조사를 통해 년도별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주민인식 분석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지원 실태를 주민자치회 참여위원, 지역주민, 공무원등 신분에 따른 인식차이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은 시행 5년차로 충남도의 현실적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선 5년이 충남형 주민자치의 기반마련과 확산을 위한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년은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기간이 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현황조사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시범실시 기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현황 및 분석

1)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현황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발굴·확산을 위하여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형 시범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해나가는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충남형 주민자치 생태계 육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법령제정과 표준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발굴·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위기)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은 역량단계별, 지원 영역별로 나누어 추진중에 있으며, 역량 단계별 지원 사업은 예비단계, 도입단계, 정착단계, 확산단계 등 크게 네 단계로 분류된다. 예비단계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보다 하위 단위인 공동체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입단계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회 활동 운영비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정착단계에서는 주민자치회 기반이 마련된 곳 중 제안사업을 추진하며, 확산단계에서는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시행하는 주민자치의 최상위 단계로 보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사업은 매년 도정정책 방향과 주민자치 현황을 반영하여 명칭은 다르지만 공모사업, 시·군지원, 역량강화, 발굴·확산 등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

영역별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모사업 영역에서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등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과 도민참여 예산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사업의 경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15개 시·군 20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도, 주민의 주도를 통하여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근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군 지원 영역에서는 개방형 읍·면·동장 시범사업,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비 지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역량강화 영역에서는 주민자치회 컨설팅, 상설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아카데미,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등을 운영중이며, 발굴·확산 영역에서는 온라인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만사형통 충남’ 홈페이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년도별로 다소 변화는 있으나,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예산의 경우 2018년 747백만원, 2019년 1,035백만원, 2020년 1,33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 1,253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2백만원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총 예산의 변화는 사업별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공모사업 분야의 경우 매년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역량강화 분야와 발굴·확산 분야의 지원 사업들은 축소되거나 수행되지 않는 변화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사업 예산과 사업내용의 변화는 충청남도가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발굴과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6〉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년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8			2019			2020			2021		
		계	도	시 군	계	도	시 군	계	도	시 군	계	도	시 군
합 계		747	477	270	1,035	635	400	1,335	890	445	1,253	713	540
공 모 사 업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460			700	370	330	1,015	640	375	832	416	416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60	60		40	40		40	40		40	20	20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400	200	200	660	330	330	750	375	375	648	324	324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	-						225			144	72	72
	도민참여 예산 등										961	480.5	480.5
시 · 군 지 원	개방형 읍·면·동장 시범사업				60	60		500	500		150	150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비 지원							60	60		30	30	
역 량 강 화	주민자치회 컨설팅	80	80		90	90		90	90		90		
	상설 주민자치학교	16	16		16	16		18	18		26	26	
	주민자치 아카데미	140	70	70	140	70	70	140	70	70	119	59.5	59.5
발 굴 · 확 산	사진&영상 공모전	9	9		15	15		15	15		10	10	
	사례집 발간	6	6		30	30		16.2	16.2		8.5	8.5	
	주민자치 한마당	36	36		44	44		40.9	40.9		39	39	

*충청남도 내부자료

2) 단계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분석

(1) 예비단계

① 추진 방향성

예비단계의 추진방향은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등 읍면동의 자치 역량 강화 지원에 있으며, 도내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자치와 참여를 훈련하여 사람을 키워 주민이 동네 일을 주도하는 생활속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 정책이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갈등해소 주민화합 등 동네 여건에 맞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마중물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다. 충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의 활성화가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예산지원

예산지원액은 2018년 60백만원 이후 2019년-2021년간 매년 40백만원이 균등하게 지원되었으며,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간 전액 도비 지원 후 2021년은 시·군 예산분담 형태로 추진되었다. 도내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예산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며, 사업비 보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공동체별 지원액수는 200만원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예산 지원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60	60	0	40	40	0	40	40	0	40	20	20

③ 주요 사업 및 성과

매년 20개소 정도의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초기 지역의 현안이나 주민수요에 맞춘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지역문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주요 도정정책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추진중이다. 도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동네공동체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획일화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표 18〉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사업 주요내용

년도	지원지역	주요 사업
2019	20개소	· 복지지원(반찬지원, 돌봄, 사진) · 교육(정보화 교육, 심리상담, 부모교육) · 문화(지역투어,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환경(중고물품 나누기, 장난감 대여) · 홍보(책자 발간, 홍보영상 제작)
2020	20개소	· 지역문제(청소년 원탁회의, 환경교육 및 쓰레기 수거 등) · 저출산(놀이터 벽화그리기 등) · 고령화(사진촬영, 반찬나누기, 주거 여건 개선 등) · 양극화(소외계층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2021	20개소	· 지역문제(지역의제 발굴, 산책로 정비, 심리치료 지원 등) · 저출산(진로 탐색 등) · 고령화(사진촬영, 빨래 수거 및 세탁, 주거 여건 개선 등) · 양극화(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자치회 전환의 전단계로써 주민자치회 운영 역량의 학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내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중 충남형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지속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주민자치회 전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환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 시범공동체 운영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 시범공동체 운영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 시범공동체 운영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 시범공동체 운영
	7	5	9	3	9	3	9	4

〈표 20〉 충청남도 주민자치 시범공동체 현황

시군	계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아파트
계	101	41	47	13
천안	14	■ 문성동 주민자치위 ■ 백석동 주민자치위 ■ 봉명동 주민자치위 ■ 부성1동 주민자치위 ■ 성정1동 주민자치위 ■ 쌍용1동 주민자치위 ■ 쌍용2동 주민자치위 ■ 일봉동 주민자치위 ■ 성환읍 주민자치위 ■ 북면 주민자치위 ■ 원성1동 주민자치회	■ 성거읍 모전1리	■ 쌍용동 주공9단지@ ■ 쌍용3동 주공7단지1차@
공주	10	■ 웅진동 주민자치위 ■ 유구읍 주민자치위 ■ 반포면 주민자치회	■ 계룡면 내흥2리 ■ 반포면 사봉마을 ■ 우성면 내산1리 ■ 우성면 한천리 ■ 의당면 도신리 ■ 의당면 두만리 ■ 의당면 중흥1리	-
보령	6	■ 남포면 주민자치위 ■ 주교면 주민자치위 ■ 성주면 주민자치위 ■ 청라면 주민자치위	■ 성주면 성주4리 ■ 청라면 음현마을	-
아산	7	■ 온양3동 주민자치위 ■ 온양5동 주민자치위 ■ 인주면 주민자치위 ■ 탕정면 주민자치회	■ 음봉면 덕지리 ■ 음봉면 월량2리 ■ 영인면 아산1리	-
서산	8	■ 대산읍 주민자치위	■ 동문1동 온석동 ■ 성연면 해성리	■ 동문동 한라비발디@ ■ 동문2동 현대@ ■ 석남동 센스빌@ ■ 석림동 중앙하이츠@ ■ 죽성동 삼성@
논산	5	■ 광석면 주민자치위 ■ 연산면 주민자치위 ■ 벌곡면 주민자치회	■ 벌곡면 수락2리 ■ 채운면 야화1리	-
계룡	1	-	-	■ 엄사면 황토방@

당진	5	■ 신평면 주민자치위	■ 송악읍 반촌2리	■ 당진2동 채운코아루@ ■ 송악읍 동광@ ■ 송악읍 이편한세상@
금산	7	■ 금산읍 주민자치위	■ 금성면 화림1리 ■ 군북면 조정리 ■ 남일면 마장3리 ■ 남일면 신동1리 ■ 남일면 신정2리 ■ 제원면 신안리	-
부여	4	■ 초촌면 주민자치회	■ 석성면 비당2리 ■ 석성면 현내리 ■ 장암면 점상3리	-
서천	7	■ 서면 주민자치회	■ 서천읍 군사3리 ■ 기산면 막동리 ■ 기산면 영모리 ■ 기산면 외신산리 ■ 판교면 흥림2리	■ 서천읍 클래식움@
청양	4	■ 청양읍 주민자치위 ■ 운곡면 주민자치위	■ 남양면 흥산1리 ■ 정산면 대박리	-
홍성	8	■ 결성면 주민자치위 ■ 장곡면 주민자치위 ■ 홍동면 주민자치위	■ 서부면 신리 ■ 은하면 대천리 ■ 장곡면 천태리 ■ 홍북면 중계2리	■ 홍성읍 부영@
예산	10	■ 예산읍 주민자치위 ■ 고덕면 주민자치위 ■ 광시면 주민자치위 ■ 대흥면 주민자치회 ■ 신양면 주민자치위	■ 삼교읍 상하1리 ■ 삼교읍 창정리 ■ 광시면 시목2리 ■ 광시면 장신2리 ■ 대흥면 송지대야리	-
태안	5	■ 원북면 주민자치위	■ 태안읍 인평2리 ■ 고남면 누도3리 ■ 이원면 내2리 ■ 이원면 포지2리	-

※ 충청남도 내부자료. 2021년말 기준

(2) 도입단계

① 추진 방향성

도입단계의 추진방향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용 운영비 및 컨설팅 지원에 있다. 읍·면·동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육성, 읍면동 주민공론의 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주도 자치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② 예산지원

예산지원액은 2018년 400백만원, 2019년 660백만원, 2020년 750백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 비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표 21〉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예산 지원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400	200	200	660	330	330	750	375	375	648	324	324

예산지원액은 증가중이나 예산집행률은 2018년 96%, 2019년 64%, 2020년 13% 등으로 감소추세이다. 예산집행률의 감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집합 금지 등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미흡, 대면사업 추진 어려움 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표 22〉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예산 집행	예산 액	집행 액	집행 률	예산 액	집행 액	집행 률	예산 액	집행 액	집행 률	예산 액	집행 액	집행 률
	350	336	96%	660	420	64%	750	98	13%	648	-	-

예산지원의 대상이 되는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2018년 신규 7개소, 2019년 신규 7개소, 후속 4개소, 2020년 신규 9개소, 후속 7개소, 2021년 신규 9개소, 후속 18개소로 매년 지원대상 주민자치회 개소수가 증가중이다. 신규 주민자치회에 대한 최초 지원이후 1~2년간 주민자치회의 지속사업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짧은 기간 동안의 지원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지원 기간은 2년 → 3년, 3년 → 4년으로 변화되고 있다.

〈표 23〉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지원대상	신규	후속	신규	후속	신규	후속	신규	후속
	7	-	9	4	9	16	9	18

③ 주요 사업 및 성과

도내 주민자치회 시범대상 102개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충남형과 행안부형이 혼재되어 운영중인 주민자치회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자치회는 행안부형 보다 충남형 시범대상지역에 먼저 선정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들은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의 결과로 분석될 수 있으나, 다른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표 24〉 년도별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개 소 수	계	총 남 형	행 안 부 형	계	총 남 형	행 안 부 형	계	총 남 형	행 안 부 형	자 율 전 환	계	총 남 형	행 안 부 형	자 율 전 환
	7	7	-	49	9	40	31	9	19	3	37	9	27	1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개최수는 주민자치회의 증가와 함께 증가중이다. 주민총회 개최는 2019년 23회, 2020년 60회, 2021년 48회가 개최되었으며, 안건수도 각각 112건, 818건, 842건으로 증가중이다. 총회가 개최된 지역의 주민참여율도 소폭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충남형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현황

구분	총회개최	안건수	주민수	참여자	참여율
2019	23	112	317,069	5,292	2%
2020	60	818	616,756	32,982	5%
2021	48	842	417,192	27,057	6%

〈표 26〉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현황(년도별)

구분	시군	주민자치회명
2018년 (7개소)	천안시	성정1동
	서산시	대산읍
	부여군	외산면
	서천군	마산면
	청양군	청양읍
	예산군	예산읍
	태안군	원북면
2019년 (9개소)	천안시	풍세면
	천안시	성환읍
	천안시	백석동
	서산시	부석면
	금산군	추부면
	부여군	홍산면
	서천군	장항읍
	서천군	비인면
	홍성군	홍동면
2020년 (9개소)	공주시	정안면
	보령시	대천4동
	계룡시	신도안면
	부여군	내산면
	서천군	문산면
	서천군	한산면
	청양군	정산면
	홍성군	장곡면
2021년 (9개소)	홍성군	결성면
	공주시	금학동
	보령시	대천3동
	계룡시	두마면
	당진시	송악읍
	서천군	화양면
	청양군	운곡면
	홍성군	구항면
	예산군	신양면
	태안군	이원면

(3) 정착단계

① 추진 방향성

정착단계의 추진방향은 예비단계, 도입단계를 거친 주민자치회의 기반이 마련된 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② 예산지원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지원은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액은 2020년 225백만원에서 2021년 144백만원으로 감소되었다.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 비율로 사업이 추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지역은 2020년 10소에서 2021년 8개소로 감소하였으며, 사업지원 지역의 감소가 예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7〉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예산지원	225	225	0	144	72	72

③ 주요 사업 및 성과

주요사업의 유형은 충남도 정책목표와 동일한 3대 위기(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증가추세인데 비해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의 지원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안사업의 감소는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모 등 사업추진을 위한 내부역량의 미흡, 상근인력의 부족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제안사업 추진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구분	지원지역	주요 사업
2020	10개소	· 지역문제(청소년 동아리 운영, 마을학교 운영, 폐기물 처리 등) · 저출산(놀이터시설 설치 등) · 고령화(공원조성, 사진촬영, 주거만족도 개선 등)
2021	8개소	· 지역문제(북카페 운영 등) · 저출산(찾아가는 동화 프로그램 등) · 고령화(사진촬영, 빨래 수거 및 세탁, 주거 환경 개선 등) · 양극화(취약계층 지원, 발달장애인카페 운영 등)

(4) 확산단계

① 추진 방향성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확산단계의 추진방향은 예비단계, 도입단계, 정착단계를 거친 주민자치회를 운영중인 지역에서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운영중이며, 도내 2개소(공주시 중학동, 당진시 신평면)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하고 실시하고 있다.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실시지역에서는 보건·복지, 3대 위기 극복 등을 주제로 한 자치계획과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선출한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가 협업하여 이를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② 예산지원

충청남도의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 지원은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액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공주시 중학동, 당진시 신평면에 각각 400백만원, 325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충청남도의 다른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도비로 100%가 지원되었으며, 예산의 집행률은 각각 63.8%, 8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2022		
	지원액	집행액	집행률
공주시 중학동	400	255	63.8%
당진시 신평면	325	275	84.6%

③ 주요 사업 및 성과

현재 충남형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구체적인 지표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자료는 적은 편이다. 다만 개방형 읍·면·동장에 지원한 대상자들은 공모시 지역별 현안 해결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임기내 주요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이에 대한 사업내용 분석과 이행률을 분석해 보았다.

〈표 29〉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 사업 추진 현황

지역	분야	사업계획	추진	미실시	이행율
계		57	25	32	43.9%
공주시 중학동	3대 위기 극복	8	4	4	50.0%
	주민자치 활성화	5	2	3	40.0%
	지역경제 활성화	7	0	7	0.0%
	문화 활성화 및 지역 명소화	6	6	0	100.0%
	주민과의 소통 강화	4	3	1	75.0%
	소계	30	15	15	50.0%
당진시 신평면	3대 위기 극복	5	4	1	80.0%
	주민·마을자치 활성화	2	2	0	100.0%
	지역경제 활성화	2	0	2	0.0%
	관광 활성화	4	0	4	0.0%
	주민 등과 소통 강화	5	1	4	20.0%
	기반시설 확충 노력	9	3	6	33.3%
	소계	27	10	17	37.0%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지역의 주요사업 유형은 충남도 정책목표와 동일한 3대 위기(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었다. 도내 개방형 읍·면·동장제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주시 중학동은 5개 분야 30개의 주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추진 15개, 미실시 15개로 이행율은 50.0%로 나타났다. 당진시 신평면은 6개 분야 27개의 주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추진 10개, 미실시 17개로 이행율은 37.0%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3대 위기 극복, 주민자치 활성화 분야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노력 분야에서는 두 대상지역 모두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등의 분야가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 추진이 어려운 단위의 사업으로 인한 문제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행율을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우리 사회의 문제점(코로나19 확산 등)과 지역 내 현실을 반영한 보다 면밀한 실태분석이 요구된다.

〈표 30〉 공주시 개방형 읍·면·동장 임기내 주요 사업 계획

지역	주요 사업계획
공주시 중학동	· 임기내 주요 사업 계획으로 5개 부문 30개 사업 제안 · 3대 위기 극복(8개 사업) - 독거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 어르신 복지놀이터 공모사업 참여 - 한전연계 독거노인 전기 소모량 확인체계 구축(미실시) - 어르신 마을기업 육성(봉황 큰샘 브랜드화)(미실시) - 어르신 제민천 가꾸기 사업(100m 담당제 운영) -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세이브콜 운영(미실시) - 사랑의 우체통 설치로 복지 사각지대 관리 - 청춘 1318 카페 활성화(진로 토크쇼)(미실시) · 주민자치 활성화(5개 사업) -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지원조직 체계 구축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운영(반려 동·식물, 노래교실 등) - 타 지자체와의 MOU 체결(2건)(미실시) - 동장실을 주민자치회 전용 구역으로 전환(미실시) - 주민자치회를 통한 조례발의(역사가 있는 사업장 및 향토음식 보존 지원 관련)(미실시) · 지역경제 활성화(7개 사업) - 우리동네 사업장 이용 캠페인(지역민 할인혜택)(미실시) - 플리마켓 운영(지역 예술단체 연계)(미실시) - 야간 투어프로그램 운영(하숙마을 연계하여 작가 토크쇼, 골목길 투어)(미실시) - 중학동에서 1개월 살아보기 운영(귀촌 유도)(미실시) - 역사를 품은 성실한 사업장 육성 지원(미실시) - 관내 3개 고교와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미실시) - 하숙마을 노래비 설치 등 (미실시) · 문화 활성화 및 지역 명소화(6개 사업) - 축제운영(누들축제, 다문화 축제, 깍두기 축제, 얼음조각 축제)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큰샘축제 활성화 - 제민천 연계 프로젝트(사진&영상 공모전) - 풀꽃 문학관 연계 골목길 투어 -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움박 운영 - 공유텃밭 및 개인정원 공개 · 주민과의 소통 강화(4개 사업) - SNS 운영(밴드, 페이스북, 유튜브 등) - 동 소식지 발행 - 주민과의 간담(월 1회) - 우리동네 런닝맨, 동장과 사이다 톡(1회 이상/월)(미실시)

〈표 31〉 당진시 개방형 읍·면·동장 임기내 주요 사업 계획

지역	주요 사업계획
당진시 신평면	· 임기내 주요 사업 계획으로 6개 분야 27개 사업 제안 · 3대 위기 극복(5개 사업) - 어르신 일자리 제공(어린이 돌봄, 도서관 책읽기 등) - 사랑의 우유 나눔 지원사업(소외계층 60가구) - 주민신고제를 통한 양극화 해결방안 모색(미실시) - 신평면 복지시스템 - 맵 기반 구축(맞춤형 관리)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심리상담 등) · 주민·마을자치 활성화(2개 사업) - 주민자치 및 마을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 찾아가는 마을 프로그램 확대운영(연극동아리, 실버합창단, 건강체조 등) · 지역경제 활성화(2개 사업)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2APC 활용 농산물수매 원스탑 서비스 구축(미실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작업단(농협 협조) 운영(미실시) · 관광활성화(4개 사업) - 삼교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오토캠핑장 등)(미실시) - 해안관광도로 개설로 드라이브 코스 개발(미실시) - 매산 갈판해변 해수욕장 개발(미실시) - 제2APC와 오봉제 수변공원 활용한 관광객 유치(미실시) · 주민 등과 소통 강화(5개 사업) - 면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운영(미실시) -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미실시) - 미래 신평면 발전계획에 대한 컨설팅 실시 - 면과 마을간 비대면 영상회의 등 운영(미실시) - 기업체와 주기적인 만남을 통한 소통(분기별)(미실시) · 기반시설 확충 노력(9개 사업) -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등 - 읍 청사 행정복합타운 신축(커뮤니티센터 구축)(미실시) - 금천도시개발사업 조기 착수(아파트 허가 관련 협의 中)(미실시) - 읍승격 추진위원회 재가동(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입 추진)(미실시) -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한양다리-오봉제간)(미실시) - 신평시장 정주여건 개선사업 - 도서관, 수영장, 그린공원 구축(미실시) - 복지 사각지대 CCTV 설치 - 사회복지회관, 문화복지 센터건립 등(미실시)

3) 연차별 추진 현황 분석

충청남도에서는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이라는 정책을 통하여 대상지역별로 3년간 충남형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 대상 주민자치회의 연차별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로드맵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면서 수행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점검과 평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하여 기존에 마련된 연차별 로드맵을 바탕으로 원내·외 전문가 자문과 충청도청 관계관의 업무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항목과 세부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현황분석을 위한 부문은 예비단계,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며, 부문별 세부 분석기준을 마련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예비단계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구성의 전단계로써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의 운영과 사업실행, 주민자치위원의 사전교육 등 주민자치회 구성 전의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구성에서는 사무국 설치, 주민자치위원수, 상근인력 여부, 전담공무원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주민자치회 운영에서는 총회개최 이력, 총회사업 실행, 분과 운영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 주민자치회 활성화에서는 공모사업 참여 여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주민참여 혁신모델로 추진중인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해 사업추진 기간에 축적된 충남도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 기준을 활용한 조사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차별로 추진된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의 예산과 주요 사업내용 등을 살펴보고 현황분석 기준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충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예산이 지원되는 3년을 대상으로 1년차 30점, 2년차 50점, 3년차 70점의 기준을 설정하여 연차별 역량 평가를 위한 비교 분석등을 실시하였다.

〈표 32〉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 현황 분석 기준표

부문	분석 기준	배점	세부 분석 기준
4개 부문	11개 기준	100	
예비단계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운영	5	- 미운영 : 0점 - 운영 : 5점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 실행	5	- 미실행 : 0점 - 실행 : 5점
	주민자치위원 사전 교육	10	- 60%이상 : 6점 - 80%이상 : 8점 - 전부이수 : 10점
주민자치회 구성	사무국 설치	10	- 공간미확보 : 0점 - 공간확보 : 5점(회의장無) - 공간확보 : 10점(회의장有)
	주민자치위원수	10	- 30인 이하 : 5점 - 30인 이상 : 10점
	상근인력 여부	10	- 없음 : 0점 - 비상근 : 5점 - 상근 : 10점
	전담공무원 활용도	10	- 미배치 : 0점 - 활용 미흡 : 5점 - 전적 활용 : 10점
주민자치회 운영	총회개최 이력	10	- 미개최 : 0점 - 개최이력 : 5점 - 당해연도 개최 : 10점
	총회사업 실행	10	- 미실행 : 0점 - 일부실행 : 5점 - 실행 : 10점
	분과 운영	10	- 분과계획 無 : 5점 - 분과계획 有 : 10점
주민자치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10	- 미참여 : 0점 - 참여 : 5점(타 공모) - 참여 : 10점(도 공모)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된 7개 주민자치회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주민자치회가 1년차에는 기준인 30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2년차 역시 기준인 50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년차는 기준인 70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개 주민자치회들의 1차년도 평균점수는 50.0이었으며, 2차년도, 3차년도 각각 61.4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2018년부터 지원된 주민자치회의 대부분은 지원기간 동안 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분석(2018년 지원)

연번	지역	년도		
		2018	2019	2020
1	천안시 성정1동	45	60	65
2	서산시 대산읍	75	75	65
3	부여군 외산면	60	55	60
4	서천군 마서면	40	65	60
5	청양군 청양읍	40	40	50
6	예산군 예산읍	45	70	65
7	태안군 원북면	45	65	65
합계		350	430	430
평균		50.0	61.4	61.4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된 9개 주민자치회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주민자치회는 1년차에는 기준인 30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년차에는 금산군 추부면, 부여군 홍산면, 서천군 장항읍의 경우 기준인 50점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차의 경우 모든 주민자치회가 기준인 70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부터 지원사업이 시작된 주민자치회의 대부분은 지원기간 동안 운영역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년차에 운영역량이 감소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주민자치회의 평균점수 역시 1차년도 47.8점, 2차년도 52.8, 3차년도 51.1점으로 나타나 이러한 경향을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고 있었다.

〈표 34〉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분석(2019년 지원)

연번	지역	년도		
		2019	2020	2021
1	천안시 풍세면	60	50	60
2	천안시 성환읍	55	55	50
3	천안시 백석동	65	65	55
4	서산시 부석면	45	65	50
5	금산군 추부면	55	45	45
6	부여군 홍산면	40	65	55
7	서천군 장항읍	30	30	30
8	서천군 비인면	35	35	55
9	홍성군 홍동면	45	65	60
합계		430	475	460
평균		47.8	52.8	51.1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된 9개 주민자치회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지원된 주민자치회의 경우 2차년도 까지만 사업 분석이 진행 되었다. 2020년 지원된 모든 주민자치회는 1년차 기준인 30점을 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2년차 기준인 50점에 미치지 못하는 주민자치회는 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평균점수는 40.6점이며 2차년도 44.4점으로 소폭 운영역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분석(2020년 지원)

연번	지역	년도	
		2020	2021
1	홍성군 장곡면	45	60
2	서천군 문산면	35	50
3	보령시 대천4동	40	40
4	청양군 정산면	30	30
5	홍성군 결성면	35	40
6	공주시 정안면	50	35
7	부여군 내산면	40	40
8	서천군 한산면	45	70
9	계룡시 신도안면	45	35
합계		365	400
평균		40.6	44.4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이 2021년 시작된 9개 주민자치회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 지원된 주민자치회의 경우 1차년도 까지만 사업 분석이 진행되었다. 2021년 지원된 주민자치회는 대부분 1년차 기준인 30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차년도 평균점수는 29.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분석(2021년 지원)

연번	지역	년도
		2021
1	공주시 금학동	30
2	보령시 대천3동	55
3	계룡시 두마면	35
4	당진시 송악읍	55
5	서천군 화양면	35
6	청양군 운곡면	5
7	홍성군 구항면	0
8	예산군 신양면	5
9	태안군 이원면	45
합계		265
평균		29.4

사업 현황을 분석한 4개년도 동안의 주민자치회 역량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018년 50.0점, 2019년 53.8점, 2020년 50.8점, 2021년 41.7점으로 최근 3년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연도별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비교

	대상지역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18 지원	7개소	350	430	430	-
2019 지원	16개소	-	430	475	460
2020 지원	25개소	-	-	365	400
2021 지원	27개소	-	-	-	264
합계		350	860	1,270	1,125
평균		50.0	53.8	50.8	41.7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이 추진된 주민자치회들의 연차별 사업역량 점수를 비교해보면 2018년부터 지원된 주민자치회 평균이 50.0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9년부터 지원 47.8점, 2020년부터 지원 40.6점, 2021년부터 지원 29.4점으로 지원년도가 늦을수록 1차년도 사업역량 평가 점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지원 주민자치회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충청남도의 지원 정책에 의해 추진된 충남형 주민자치회들이 구성과 운영의 준비가 부족했으며,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 목표나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2차년도와 3차년도 역시 주민자치회 사업역량 평균 점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차년도의 경우 2차년도와 점수가 같거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도나 시·군에서 지원하는 정책 이외에는 운영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독자적인 사업영역의 발굴, 자치회로서의 자생력 확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8〉 연차별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비교

대상지역	평균 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18년 지원	50.0	61.4	61.4
2019년 지원	47.8	52.8	51.1
2020년 지원	40.6	44.4	-
2021년 지원	29.4	-	-

2.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인식 분석

1) 인식조사 개요

(1)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인식조사 대상은 도내 15개 시·군의 지역주민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주민자치회 참여위원, 지역주민, 공무원이며,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주민자치 관련 대표,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인식분석을 위하여 2022. 9. 19. ~ 9. 30.(2주간) 도내 15개 시·군의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거주하는 지역주민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충남형 주민자치회 일반인식, 충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정책에 관한 주민의 인식 분석과 이를 통한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문항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구성을 위하여 원내·외 전문가 자문과 충남도청 및 주민자치회 참여위원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조사 구성과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한 후 설문항목을 작성하였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의 구성은 크게 다섯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영역(I)은 주민자치회 일반 및 운영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일반인식, 성격, 운영형태, 운영의 중요 요인, 운영과정의 문제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일반인식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인지, 목적과 취지, 주민자치회 유형에 따른 차이 인식 등을 세분화하여 질문하였다.

조사영역(II)은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실시 이후 성과와 개선사항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충청남도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세분화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조사영역(Ⅲ)은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선정과 향후 수행 업무, 개선분야, 추진 정책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영역(Ⅳ)에서는 개방형 읍면동장제가 운영중인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인식,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영역(Ⅴ)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신분, 거주지, 거주기간을 묻는 문항으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4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도내 시·군별로 각각 100부씩 총 1,500부가 추진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유효한 응답을 보인 1,174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주민자치회 일반 및 운영인식, 충남형 주민자치회 성과 인식, 충남형 주민자치회 발전 방안 등 각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응답자의 신분별 특성에 따른 응답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 평균분석 등 필요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9〉 조사 설문문항 구성

조사영역	문항번호	측정요인	비고
조사영역(Ⅰ) 주민자치회 일반 및 운영 인식	Q1	주민자치회의 일반적 인식	서열척도
	Q2	주민자치회의 성격 인식	명목척도
	Q3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	"
	Q4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	"
	Q5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의 문제점	"
조사영역(Ⅱ) 충남형 주민자치회 성과 인식	Q6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	서열척도
	Q7	충남형 주민자치회 실시 이후 개선점	명목척도
	Q8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정책 만족도	서열척도
조사영역(Ⅲ) 충남형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Q9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명목척도
	Q10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분	"
	Q11	주민자치회 주요 업무	"
	Q12	주민자치회를 통한 개선 분야	"
	Q13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산을 위한 정책 분야	"
	Q14	충남형 주민자치회 자율 의견	"
조사영역(Ⅳ) 개방형 읍·면·동장제 인식	Q15	개방형 읍·면·동장제도의 일반적 인식	서열척도
	Q16	개방형 읍·면·동장제도의 진단과 평가	"
	Q17	개방형 읍·면·동장제도의 만족도	명목척도
	Q18	개방형 읍·면·동장제도의 확산 인식	"
	Q19	개방형 읍·면·동장제도의 방향성	"
	Q20	개방형 읍·면·동장제도 자율 의견	"
조사영역(Ⅴ) 인구통계학적 요인	Q21	성별	서열척도
	Q22	연령별	"
	Q23	신분별	"
	Q24	거주지역	명목척도
	Q25	거주기간	서열척도

2)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신분,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604명(51.4%), 여성이 571명(48.6%)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 1명(0.1%), 20대 51명(4.3%), 30대 113명(9.6%), 40대 249명(21.2%), 50대 382명(32.5%), 60대 이상 379명(32.3%) 으로 50대 이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713명(60.7%)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주민 357명(30.4%), 공무원 105명(8.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홍성이 145명(12.3%)로 가장 많고, 대전이 1명(0.1%)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 151명(12.9%), 6년~10년 미만 160명(13.6%), 10년~15년 미만 148명(12.6%), 15년~20년 미만 177명(15.1%), 20년 이상 539명(45.9%) 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은 지역에서 20년이상 거주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604	51.4%
	여	570	48.6%
	전체	1174	100%
연령	10대	1	0.1%
	20대	51	4.3%
	30대	113	9.6%
	40대	248	21.1%
	50대	382	32.5%
	60대 이상	379	32.3%
	전체	1174	100%
신분	공무원	105	8.9%
	주민자치회 위원	713	60.7%
	지역주민	356	30.4%
	전체	1174	100%
거주지역	계룡	53	4.5%
	공주	101	8.6%
	금산	36	3.1%
	논산	62	5.3%
	당진	85	7.2%
	대전	1	0.1%
	보령	73	6.2%
	부여	115	9.8%
	서산	117	10.0%
	서천	69	5.9%
	아산	73	6.2%
	예산	94	8.0%
	천안	69	5.9%
	청양	57	4.9%
	태안	24	2.0%
	홍성	145	12.3%
	전체	1174	100%
거주기간	5년 미만	151	12.9%
	6년~10년 미만	159	13.5%
	10년~15년 미만	148	12.6%
	15년~20년 미만	177	15.1%
	20년 이상	539	45.9%
	전체	1174	100%

(2) 주민자치회의 일반 및 운영 인식

주민자치회의 일반적 인식정도를 묻는 문항은 세부적으로 5개 문항으로 분류하여 질문하고 분석하였다. 주민자치회의 일반적 인식정도를 점수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매우 아니다’를 최하 1점으로 처리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처리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전체 평균은 3.70점으로 나타나,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해 전반적 인식은 ‘보통’ 수준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평균은 3.90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공무원의 평균은 3.25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은 3.41점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임을 알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평균은 3.69점으로 지역주민 평균 3.07점, 공무원 평균 2.71점과 비교하였을 때,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전체 평균은 3.40점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은 3.62점, 공무원의 평균은 2.74점으로 인식의 정도가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전체 평균은 3.33점이며,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52점, 지역주민 평균 3.11점, 공무원 평균 2.77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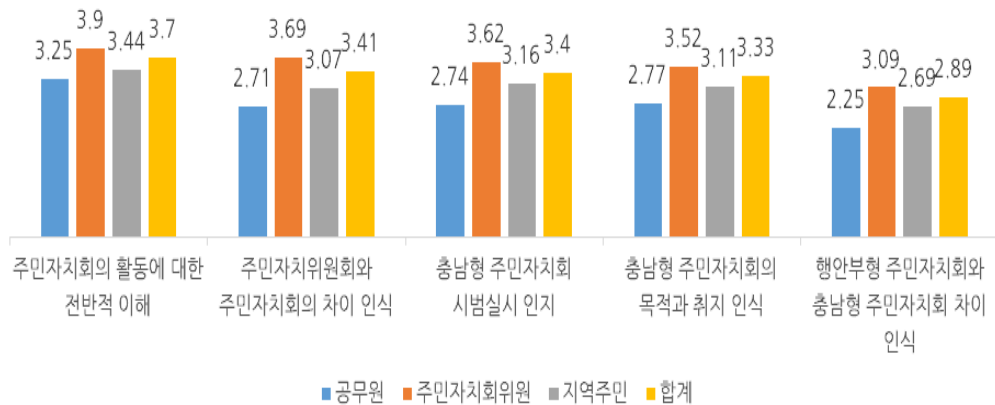
‘행안부형 주민자치회와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까?’의 질문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09점, 공무원 평균 2.25점, 지역주민 평균 2.69점으로 다른 질문에 비하여 전체평균 2.89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하의 인식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별 인식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표 32), 모든 항목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주민자치회 일반적 인식정도 평균 비교

구분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 이해	주민자치 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 인식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인지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취지 인식	행안부형 주민자치회 와 충남형 주민자치회 차이 인식
공무원	평균	3.25	2.71	2.74	2.77	2.25
	N	105	105	105	105	105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90	3.69	3.62	3.52	3.09
	N	713	713	713	713	713
지역주민	평균	3.44	3.07	3.16	3.11	2.69
	N	356	356	356	356	356
합계	평균	3.70	3.41	3.40	3.33	2.89
	N	1174	1174	1174	1174	1174
F		46.840	68.907	44.947	37.490	40.517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p<0.0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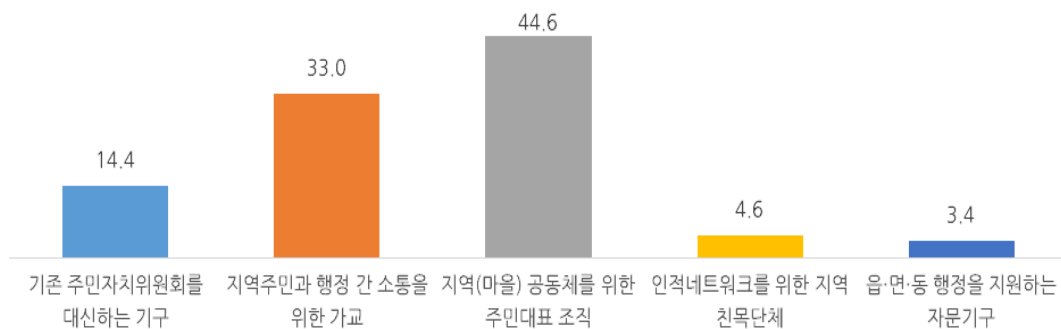


[그림 7] 주민자치회 일반적 인식정도 평균 비교도

‘주민자치회를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지역(마을) 공동체를 위한 주민대표 조직’이 524명(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가 387명(33.0%)로 두 번째로 높았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 169명(14.4%),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지역 친목단체’ 54명(4.6%), ‘읍·면·동 행정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40명(3.4%)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2〉 주민자치회의 성격 인식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	비율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	169	14.4%
지역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	387	33.0%
지역(마을) 공동체를 위한 주민대표 조직	524	44.6%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지역 친목단체	54	4.6%
읍·면·동 행정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40	3.4%
전체	1174	100.0%



[그림 8] 주민자치회의 성격 인식 빈도분석 결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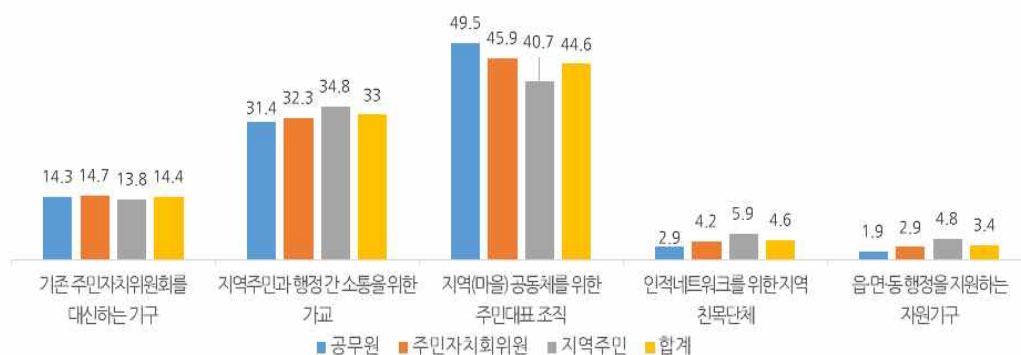
다음은 신분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성격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표 34)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의 성격과 관계에 대해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 주민 모두 ‘지역(마을) 공동체를 위한 주민대표 조직’으로 보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차표를 토대로 신분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성격과 관계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chi^2=8.068$, $p=.427$ 로 기각되어 신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주민자치회의 성격과 관계

구분	신분			합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	15(14.3%)	105(14.7%)	49(13.8%)	169(14.4%)
지역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가교	33(31.4%)	230(32.3%)	124(34.8%)	387(33.0%)
지역(마을) 공동체를 위한 주민대표 조직	52(49.5%)	327(45.9%)	145(40.7%)	524(44.6%)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지역 친목단체	3(2.9%)	30(4.2%)	21(5.9%)	54(4.6%)
읍·면·동 행정을 지원하는 자원기구	2(1.9%)	21(2.9%)	17(4.8%)	40(3.4%)
합계	105(100.0%)	713(100.0%)	356(100.0%)	1174(100.0%)
$\chi^2=8.068$, $p=.427$				

**p<0.0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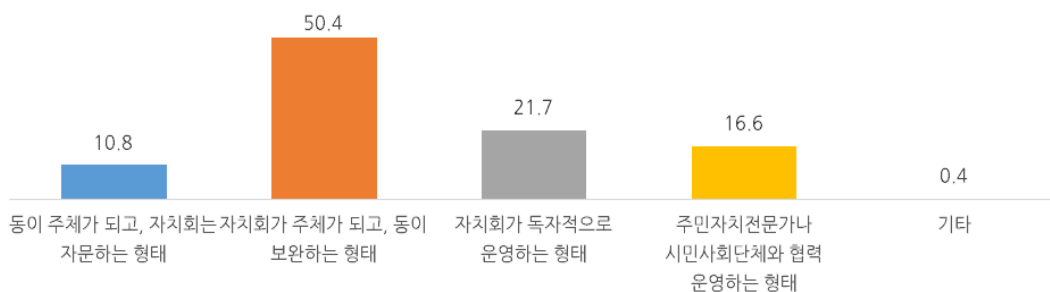


[그림 9] 주민자치회의 성격과 관계도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자치회가 주체가 되고, 동이 보완하는 형태’가 592명(50.4%)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치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255명(21.7%), ‘주민자치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운영하는 형태’는 195명(16.6%), ‘동이 주체가 되고, 자치회는 자문하는 형태’ 127명(10.8%)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는 5명(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	비율
동이 주체가 되고, 자치회는 자문하는 형태	127	10.8%
자치회가 주체가 되고, 동이 보완하는 형태	592	50.4%
자치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255	21.7%
주민자치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운영하는 형태	195	16.6%
기타	5	0.4%
전체	1174	100.0%



[그림 10]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 빈도분석 결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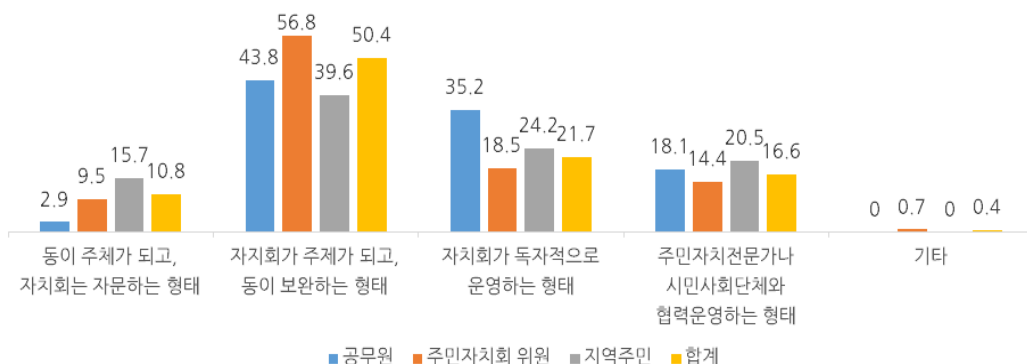
다음은 신분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와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표 36)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와 관계에 대해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모두 ‘자치회가 주체가 되고, 동이 보완하는 형태’로 보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차표를 토대로 신분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와 관계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chi^2=51.916$, $p=.000$ 로 나타나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5〉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와 관계

구분	신분			합계
	공무원	주민자치회위원	지역주민	
동이 주체가 되고, 자치회는 자문하는 형태	3(2.9%)	68(9.5%)	56(15.7%)	127(10.8%)
자치회가 주체가 되고, 동이 보완하는 형태	46(43.8%)	405(56.8%)	141(39.6%)	592(50.4%)
자치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37(35.2%)	132(18.5%)	86(24.2%)	255(21.7%)
주민자치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운영하는 형태	19(18.1%)	103(14.4%)	73(20.5%)	195(16.6%)
기타	0(0.0%)	5(0.7%)	0(0.0%)	5(0.4%)
합계	105(100.0%)	713(100.0%)	356(100.0%)	1174(100.0%)
$\chi^2=51.916$, $p=.000^{**}$				

** $p<0.01$,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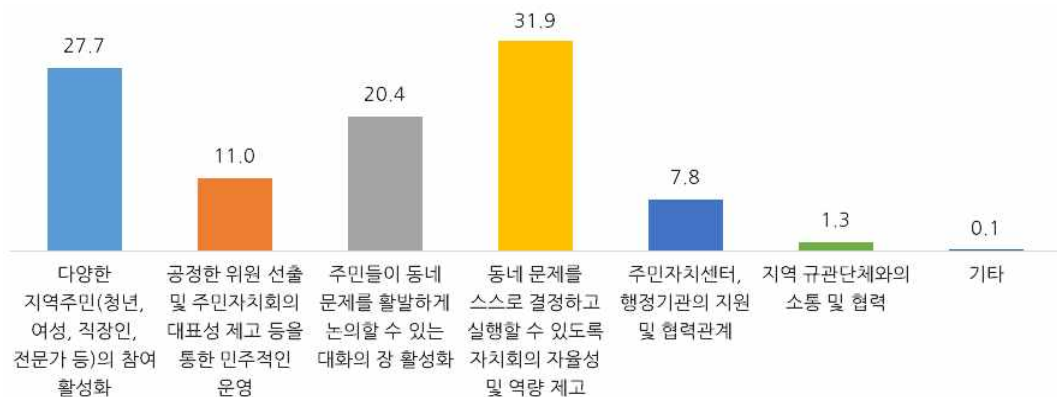


[그림 11]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운영형태와 관계도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동네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치회의 자율성 및 역량 제고’가 374명(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지역주민(청년, 여성, 직장인, 전문가 등)의 참여 활성화’가 325명(27.7%), ‘주민들이 동네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 활성화’가 239명(20.4%)순으로 응답하였다. ‘공정한 위원 선출 및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등을 통한 민주적인 운영’은 129명(11.0%), ‘주민자치센터, 행정기관의 지원 및 협력관계’ 91명(7.8%), ‘지역 유관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 15명(1.3%)로 나타났다. 기타는 1명(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	비율
다양한 지역주민(청년, 여성, 직장인, 전문가 등)의 참여 활성화	325	27.7%
공정한 위원 선출 및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등을 통한 민주적인 운영	129	11.0%
주민들이 동네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 활성화	239	20.4%
동네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치회의 자율성 및 역량 제고	374	31.9%
주민자치센터, 행정기관의 지원 및 협력관계	91	7.8%
지역 유관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	15	1.3%
기타	1	0.1%
전체	1174	100.0%



[그림 12]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 빈도분석 결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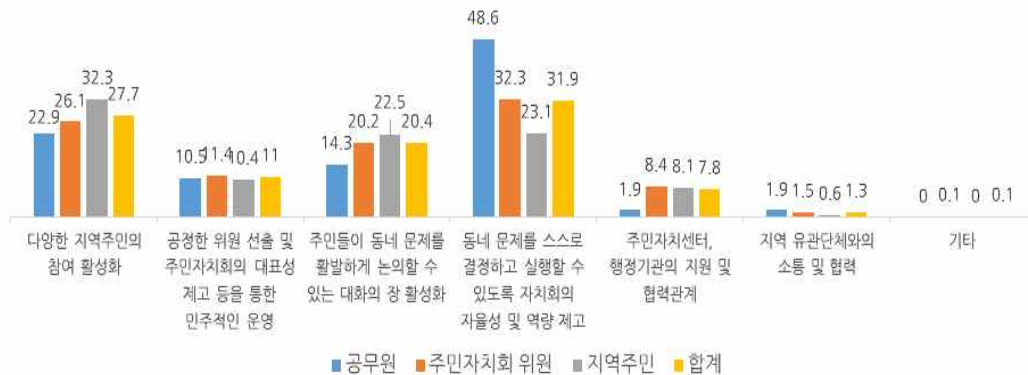
다음은 신분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표 38)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과 관계를 살펴보면 공무원, 일반주민의 경우 ‘동네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치회의 자율성 및 역량 제고’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는데 반해, 지역주민의 경우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로 보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차표를 토대로 신분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과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chi^2=28.021$, $p=.005$ 로 나타나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7〉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과 관계

구분	신분			합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24(22.9%)	186(26.1%)	115(32.3%)	325(27.7%)
공정한 위원 선출 및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등을 통한 민주적인 운영	11(10.5%)	81(11.4%)	37(10.4%)	129(11.0%)
주민들이 동네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 활성화	15(14.3%)	144(20.2%)	80(22.5%)	239(20.4%)
동네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치회의 자율성 및 역량 제고	51(48.6%)	230(32.3%)	93(23.1%)	374(31.9%)
주민자치센터, 행정기관의 지원 및 협력관계	2(1.9%)	60(8.4%)	29(8.1%)	91(7.8%)
지역 유관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	2(1.9%)	11(1.5%)	2(0.6%)	15(1.3%)
기타	0(0.0%)	1(0.1%)	0(0.0%)	1(0.1%)
합계	105(100.0%)	713(100.0%)	356(100.0%)	1174(100.0%)
$\chi^2=28.021$, $p=.005^{**}$				

** $p<0.01$,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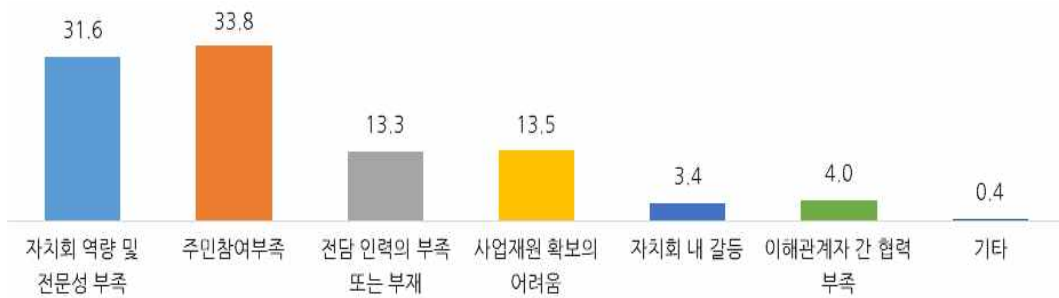


[그림 13] 주민자치회 운영의 중요 요인과 관계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주민참여 부족’이 397명(33.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이 371명(31.6%)로 두 번째로 높았다. ‘사업재원 확보의 어려움’ 158명(13.5%), ‘전담 인력의 부족 또는 부재’ 156명(13.3%)로 나타났으며, ‘이해관계자 간 협력 부족’ 47명(4.0%), 자치회 내 갈등 40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5명(0.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8>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	비율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	371	31.6%
주민참여 부족	397	33.8%
전담 인력의 부족 또는 부재	156	13.3%
사업재원 확보의 어려움	158	13.5%
자치회 내 갈등	40	3.4%
이해관계자 간 협력 부족	47	4.0%
기타	5	0.4%
전체	1174	100.0%



[그림 1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빈도분석 결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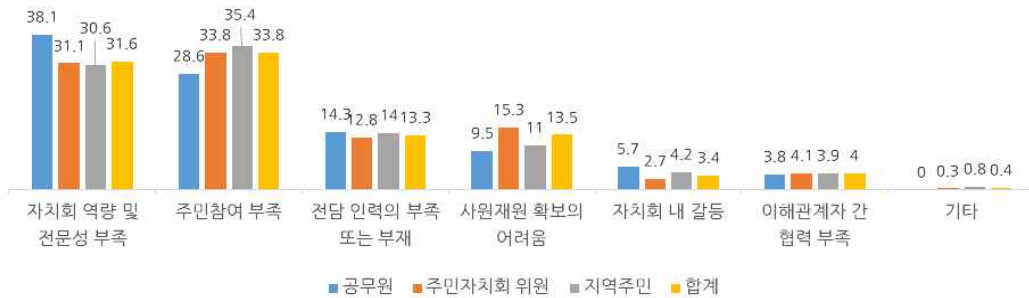
다음은 신분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표 40)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관계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는데 반해,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주민의 경우 ‘주민참여 부족’으로 보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차표를 토대로 신분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chi^2=13.441$, $p=.338$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9〉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관계

구분	신분			합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	40(38.1%)	222(31.1%)	109(30.6%)	371(31.6%)
주민참여 부족	30(28.6%)	241(33.8%)	126(35.4%)	397(33.8%)
전담 인력의 부족 또는 부재	15(14.3%)	91(12.8%)	50(14.0%)	156(13.3%)
사업재원 확보의 어려움	10(9.5%)	109(15.3%)	39(11.0%)	158(13.5%)
자치회 내 갈등	6(5.7%)	19(2.7%)	15(4.2%)	40(3.4%)
이해관계자 간 협력 부족	4(3.8%)	29(4.1%)	14(3.9%)	47(4.0%)
기타	0(0.0%)	2(0.3%)	3(0.8%)	5(0.4%)
합계	105(100.0%)	713(100.0%)	356(100.0%)	1174(100.0%)
$\chi^2=13.441$, $p=.338$				

**p<0.01, *p<0.05



[그림 15]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관계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에 참여한 주민자치회는 태안군 원북면 주민자치회, 서천군 장항읍 주민자치회로 선정하였으며,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추진이 완료된 주민자치회로 타 주민자치회와 비교하여 우수한 활동과 주민참여가 이루어진 주민자치회이다. 주민자치회별로 각각 5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FGI에 참여하였다.

먼저 주민참여 부족에 대한 의견으로 군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가 적고 구성원들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주민의 참여,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나 인센티브가 적은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의견으로는 구성원의 고령화와 연계되어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기본적인 문서작성, 회계처리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민자치회별로 젊은 구성원이 참여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없을 경우 운영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사업재원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재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은 3~4년동안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예산지원이 종료된 이후의 주민자치회 운영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된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에서는 기본적인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상근인력의 인건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적인 예산이 없을 경우 주민자치회의 구성이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담 인력의 부족 또는 부재에 대한 의견으로는 앞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상근 근무자가 없을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락이나 행정처리등이 어려우며,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초기 공무원들이 관련 역할을 도와주고는 있으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자가 근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주민자치조직이라는 이유로 예산의 수립, 활용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0〉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FGI 결과

구분	주요 의견
주민참여 부족	- 인구가 적은 군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구성이 고령화 되어 주민참여나 활성화가 어려움 -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적음. 참여활동의 증가를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문서작성, 회계 등의 역량 부족 - 주민자치회 참여자의 주민자치 이해도 부족
사업재원 확보의 어려움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기본 예산 없음 - 공모를 통한 사업추진시 공모에 참여 자체가 어렵고, 사업비가 운영비로는 활용할 수 없음 - 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해 유연한 운영 어려움
전담 인력의 부족 또는 부재	- 주민자치회 상근자 부재 - 주민자치회 상근자에 대한 비용지원 필요

(3)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성과 인식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인식 정도를 점수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매우 아니다’를 최하 1점으로 처리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처리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로 주민자치회는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하여 활동이 많이 달라졌다.’에 전체 평균은 3.32점이며,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47점과 공무원 평균 2.83점을 비교하면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전과 비교하여 지역사회(마을)가 많이 발전되었다.’에 관한 전체 평균은 3.33점이며,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47점과 공무원 평균 2.90점을 비교하면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주민들은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의 평균 점수는 3.28점이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평균 3.41점, 공무원의 평균 2.94점으로 이 부분 또한 집단 간의 성과에 대하여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지역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의 의제를 설정하고 자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의 경우 평균 점수 3.42점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중 가장 높았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61점, 공무원 평균 3.01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하여 집단 간의 평균 점수 차이도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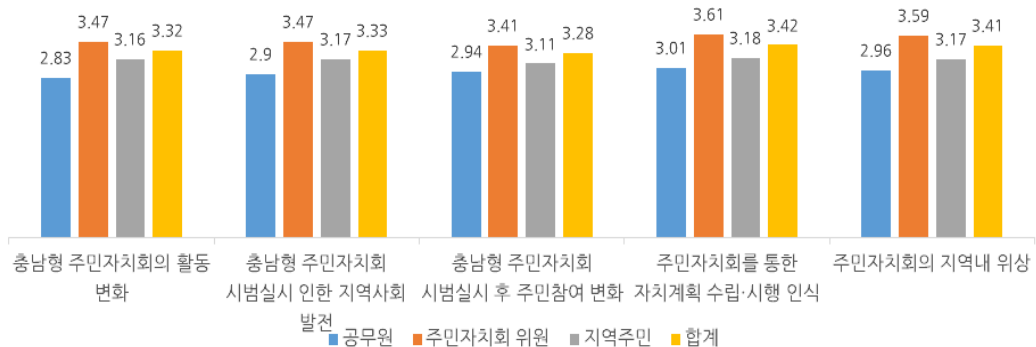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는 우리지역의 대표적 주민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의 평균 점수는 3.41점이며,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59점, 공무원 평균 2.96점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성과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이 공무원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집단별 인식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모든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인식 비교

구분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활동 변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인한 지역사회 발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후 주민참여 변화	주민자치회를 통한 자치계획 수립·시행 인식	주민자치회의 지역내 위상
공무원	평균	2.83	2.90	2.94	3.01	2.96
	N	105	105	105	105	105
주민자치회위원	평균	3.47	3.47	3.41	3.61	3.59
	N	713	713	713	713	713
지역주민	평균	3.16	3.17	3.11	3.18	3.17
	N	356	356	356	356	356
합계	평균	3.32	3.33	3.28	3.42	3.41
	N	1174	1174	1174	1174	1174
F		33.083	28.578	22.480	38.032	42.457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p<0.0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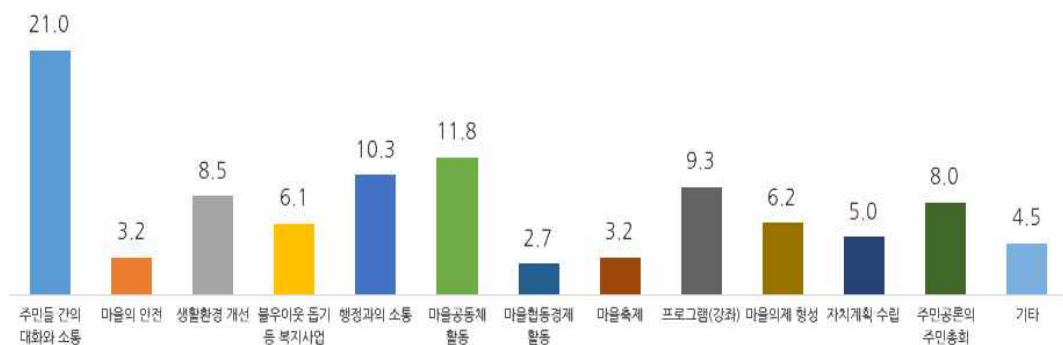


[그림 16]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인식 비교도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특별히 어떤 것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대답은 ‘주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 247명(21.0%)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139명(11.8%), ‘행정과의 소통’이 121명(10.3%)로 상당수의 응답을 보였다.

〈표 52〉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 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주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	247	21.0%
마을의 안전	37	3.2%
생활환경 개선	100	8.5%
불우이웃 돕기 등 복지사업	72	6.1%
행정과의 소통	121	10.3%
마을공동체 활동	139	11.8%
마을협동경제 활동	32	2.7%
마을축제	38	3.2%
프로그램(강좌)	109	9.3%
마을의제 형성	73	6.2%
자치계획 수립	59	5.0%
주민공론의 주민총회	94	8.0%
기타	53	4.5%
전체	1174	100.0%



[그림 17]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 빈도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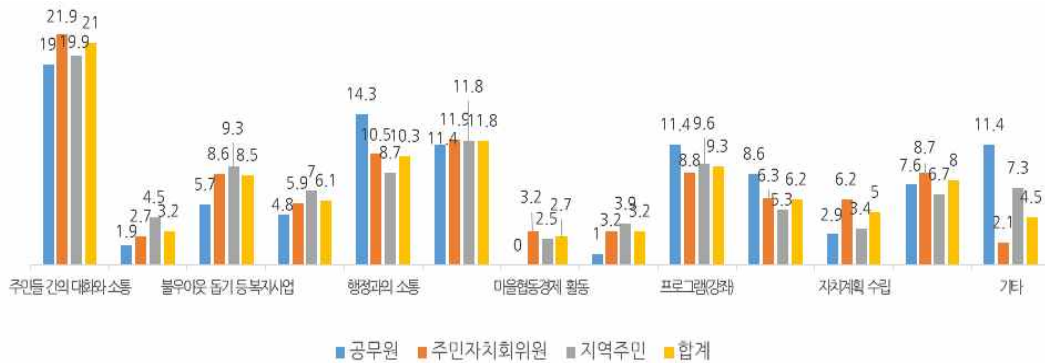
다음은 신분에 따라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표 44)을 실시하였다.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과 관계를 살펴보면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모두 ‘주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으로 보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차표를 토대로 신분에 따라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과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chi^2=48.586$, $p=.002$ 로 나타나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3〉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과 관계

구분	신분			합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주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	20(19.0%)	156(21.9%)	71(19.9%)	247(21.0%)
마을의 안전	2(1.9%)	19(2.7%)	16(4.5%)	37(3.2%)
생활환경 개선	6(5.7%)	61(8.6%)	33(9.3%)	100(8.5%)
불우이웃 돕기 등 복지사업	5(4.8%)	42(5.9%)	25(7.0%)	72(6.1%)
행정과의 소통	15(14.3%)	75(10.5%)	31(8.7%)	121(10.3%)
마을공동체 활동	12(11.4%)	85(11.9%)	42(11.8%)	139(11.8%)
마을협동경제 활동	0(0.0%)	23(3.2%)	9(2.5%)	32(2.7%)
마을축제	1(1.0%)	23(3.2%)	14(3.9%)	38(3.2%)
프로그램(강좌)	12(11.4%)	63(8.8%)	34(9.6%)	109(9.3%)
마을의제 형성	9(8.6%)	45(6.3%)	19(5.3%)	73(6.2%)
자치계획 수립	3(2.9%)	44(6.2%)	12(3.4%)	59(5.0%)
주민공론의 주민총회	8(7.6%)	62(8.7%)	24(6.7%)	94(8.0%)
기타	12(11.4%)	15(2.1%)	26(7.3%)	53(4.5%)
합계	105(100.0%)	713(100.0%)	356(100.0%)	1174(100.0%)
$\chi^2=48.586$, $p=.002^{**}$				

** $p<0.01$, * $p<0.05$



[그림 18]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이후 개선점 인식과 관계도

다음으로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공모사업 영역에서 추진중인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점수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매우 아니다’를 최하 1점으로 처리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처리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주민자치회 구성 및 사무국 운영 지원) 추진에 대해 만족한다.’의 전체 평균은 3.35점이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평균 점수가 3.50점으로 전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3대 위기 극복 및 지역 문제 해결 사업비)에 대해 만족한다.’의 전체 평균은 3.27점이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평균은 3.40점, 지역주민의 평균은 3.09점, 공무원의 평균은 3.02점으로 나타나, 본 질문에 관하여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인식 수준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3대 위기 극복 및 지역 문제 해결 모델 발굴 지원)에 대해 만족한다.’ 또한 전체 평균 3.26점이나,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37점, 지역주민 평균 3.10점, 공무원 평균 3.08점으로 주민자치회 위원과 공무원, 지역주민 사이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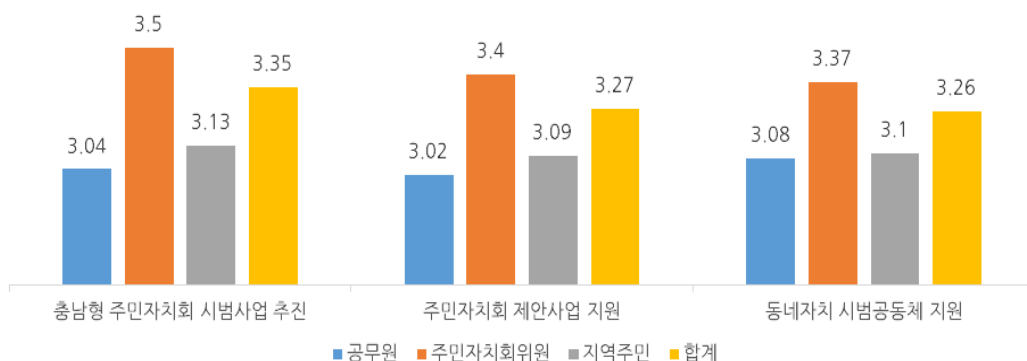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전환과 관련된 정책에 관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은 ‘보통’ 이상의 만족을 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경우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집단별 인식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표 45), $p<0.01$ 수준에서 모든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주민자치 혁신모델 사업 만족도 인식 비교

구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공무원	평균	3.04	3.02	3.08
	N	105	105	105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50	3.40	3.37
	N	713	713	713
지역주민	평균	3.13	3.09	3.10
	N	356	356	356
합계	평균	3.35	3.27	3.26
	N	1174	1174	1174
F		31.156	20.891	15.413
유의확률		.000**	.000**	.000**

** $p<0.01$, * $p<0.05$



[그림 19] 주민자치 혁신모델 사업 만족도 인식 비교도

역량강화 영역에서 추진중인 주민자치회 육성 컨설팅, 상설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온라인 주민자치 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점수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매우 아니다’를 최하 1점으로 처리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처리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주민자치회 육성 컨설팅(신규 충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의 전체 평균은 3.31점이며,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42점, 공무원 평균 3.12점으로 신분별 인식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설주민자치학교(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후속 교육 지원)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의 경우 전체 평균 3.24점이며,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35점, 지역주민 평균 3.05점으로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주민 간 상설주민자치학교 운영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 아카데미(주민자치가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의 경우 전체 평균 3.34점이며,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44점, 지역주민 평균 3.19점, 공무원 평균 3.17점으로 대체적으로 다른 질문에 비하여 신분별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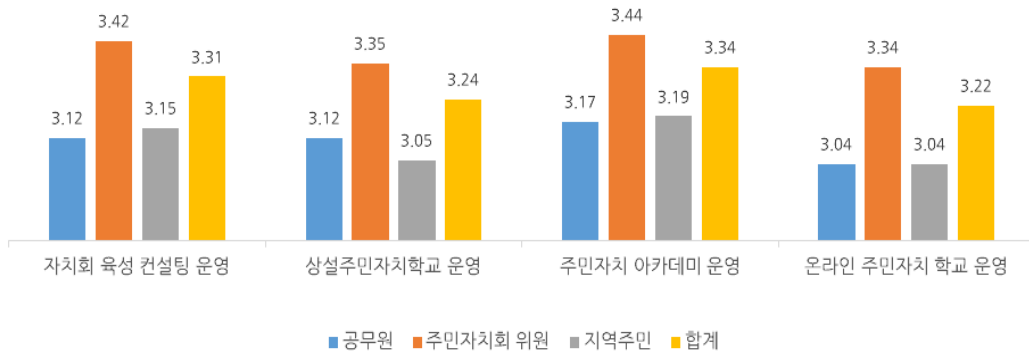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온라인 주민자치 학교(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비대면 상시 교육시스템)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의 경우 전체 평균 3.22점이며,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34점, 공무원 평균 3.04점으로 집단 간의 만족도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의 <표 46>에서 집단별 인식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모든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요 사업 만족도 인식 비교

구분		자치회 육성 컨설팅 운영	상설주민자치학 교 운영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온라인 주민자치 학교 운영
공무원	평균	3.12	3.12	3.17	3.04
	N	105	105	105	105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42	3.35	3.44	3.34
	N	713	713	713	713
지역주민	평균	3.15	3.05	3.19	3.04
	N	356	356	356	356
합계	평균	3.31	3.24	3.34	3.22
	N	1174	1174	1174	1174
F		14.547	15.829	11.844	15.924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 $p < 0.01$, * $p < 0.05$



[그림 20]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요 사업 만족도 인식 비교도

발굴·확산 영역에서 추진중인 온라인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 충남형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 행사. 충남형 주민자치 우수사례집 발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점수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매우 아니다’를 최하 1점으로 처리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처리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온라인 주민참여 시스템(주민참여 플랫폼 앱 구축 및 활용) 구축에 대해 만족한다.’의 전체 평균은 3.22점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31점, 공무원 평균 3.13점, 지역주민 평균 3.06점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충남도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통한 주민참여, 소통의장 마련)에 대해 만족한다.’의 경우 전체평균 3.25점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 3.37점, 공무원 평균 3.15점, 지역주민 평균 3.05점으로, 이 또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다른 신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충남형 주민자치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행사(동네잔치 한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자치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에 대해 만족한다.’의 경우 전체 평균 3.40점으로,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이 3.54점으로 나타나 다른 신분에 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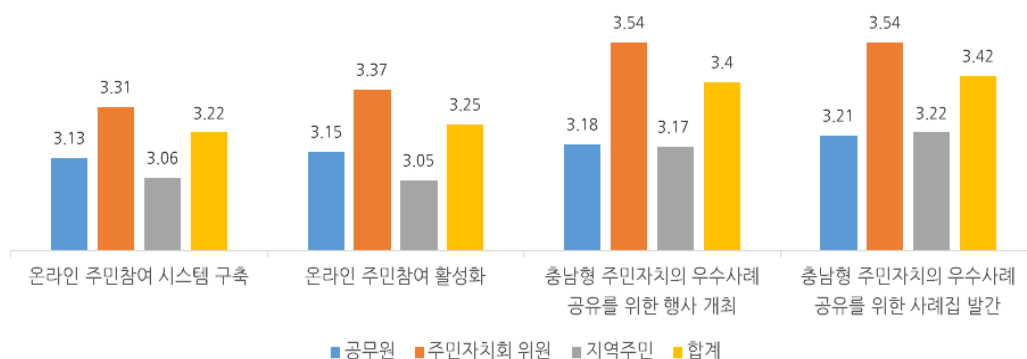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충남형 주민자치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사례집 발간에 대해 만족한다.’의 평균점수 3.42점으로 높은 편이며, 이 정책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평균 점수 3.54점으로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인식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표 47), $p<0.01$ 수준에서 모든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충남형 주민자치회 발굴·확산 주요 정책 만족도 비교

구분		온라인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	충남형 주민자치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행사 개최	충남형 주민자치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사례집 발간
공무원	평균	3.13	3.15	3.18	3.21
	N	105	105	105	105
주민자치회위원	평균	3.31	3.37	3.54	3.54
	N	713	713	713	713
지역주민	평균	3.06	3.05	3.17	3.22
	N	356	356	356	356
합계	평균	3.22	3.25	3.40	3.42
	N	1174	1174	1174	1174
F		9.480	14.703	24.552	19.705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 $p<0.01$, ** $p<0.05$



[그림 21] 충남형 주민자치회 발굴·확산 주요 정책 만족도 비교도

다음으로 개방형 읍·면·동장제도 성과 인식⁷⁾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읍·면·동장제도는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확산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선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최상위 단계이다. 하지만 아직 도내에서 확산단계까지 이른 주민자치회는 없는 상황이며, 충남도에서는 2개 지역에 예산지원을 통한 시범운영을 추진중에 있다.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운영중인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으로 응답수가 적어 직접적인 인식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인식의 경향을 알아보는 데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개방형 읍·면·동장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점수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매우 아니다’를 최하 1점으로 처리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처리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개방형 읍·면·동장제도 인식 정도 분석 결과 인식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에 개방형 읍·면·동장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라고 개방형 읍·면·동장제의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은 평균 4.38점, ‘기존의 읍·면·동장 임명방식과 개방형 공모 방식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십니까?’라는 개방형 읍·면·동장제의 시행방식을 묻는 질문은 평균 4.29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읍·면·동장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라는 개방형 읍·면·동장제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질문에는 평균 4.24점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7〉 개방형 읍·면·동장제도 인식 정도

구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개방형 읍·면·동장제 실시 인지	0	0	2	9	10	4.38
개방형 읍·면·동장제 방식 인지	0	0	1	13	7	4.29
개방형 읍·면·동장제 전반적 인식	0	0	2	12	7	4.24

다음으로 개방형 읍·면·동장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점수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매우 아니다’를 최하 1점으로 처리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처리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7)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행중인 공주시 중학동, 당진시 신평면 주민대상(21명) 인식조사 결과

개방형 읍·면·동장제도의 인식 정도 분석 결과 인식도가 상당히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에 개방형 읍·면·동장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라고 개방형 읍·면·동장제의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은 평균 4.38점, ‘기존의 읍·면·동장 임명방식과 개방형 공모 방식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십니까?’라는 개방형 읍·면·동장제의 시행방식을 묻는 질문은 평균 4.29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읍·면·동장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라는 개방형 읍·면·동장제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 질문에는 평균 4.24점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8〉 개방형 읍·면·동장제도 진단 및 평가

문 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주민과 협치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이다.	1	2	3	13	2	3.62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전시성 있는 비효율적 인사제도이다.	1	7	4	6	3	3.14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읍·면·동의 현실에 맞는 행정을 구현한다.	1	0	4	14	2	3.76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주민과 행정의 소통 및 협력을 증진시킨다.	1	0	4	11	5	3.90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한다.	1	0	4	11	5	3.90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가능하게 한다.	1	0	7	9	4	3.71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1	0	5	11	4	3.81

개방형 읍·면·동장제도 시행에 대한 만족도 인식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38로 나타났다.

〈표 59〉 개방형 읍·면·동장제도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개방형 읍·면·동장제 실시 만족도	1	0	8	9	2	3.38

개방형 읍·면·동장제도 확대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이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43으로 나타났다.

〈표 60〉 개방형 읍·면·동장제도 확대 인식

구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개방형 읍·면·동장제 실시 확대 인식	1	3	4	7	5	3.43

향후 개방형 읍·면·동장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현행 공모제 방식 유지와 공모제 대상 확대 응답이 각각 47.6%,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개방형 읍·면·동장제 향후 추진 방향

구분	빈도	비율
현행 공모제 방식 유지	10	47.6
공모제 대상 확대	5	23.8
기존 방식으로 환원	4	19.0
기타	0	0.0
무응답	2	9.5
전체	19	100.0

(4)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발전방안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확대를 위한 지역 선정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지역’이 649명(55.3%)로 절반 이상이 선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한 지역’ 235명(20.0%), ‘읍·면·동 주민추천제 지역’ 215명(18.3%)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지역’은 64명(5.4%), ‘기타’ 11명(0.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62〉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 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읍·면·동 주민추천제 지역	215	18.3%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지역	649	55.3%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지역	64	5.5%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한 지역	235	20.0%
기타	11	0.9%
전체	1174	100.0%



[그림 22]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 빈도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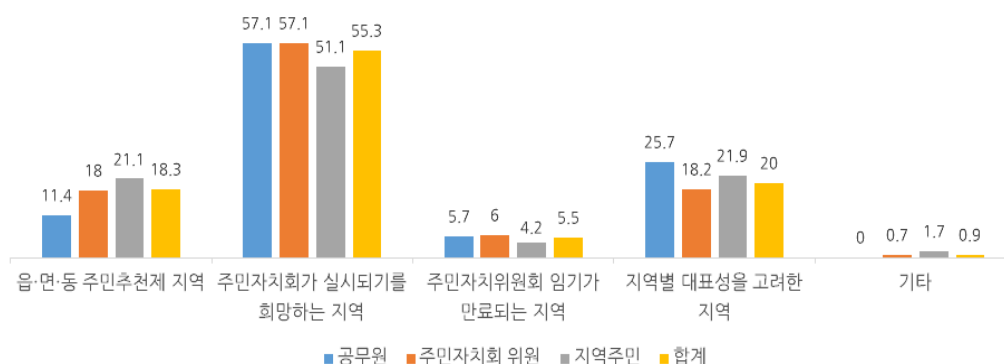
신분에 따라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과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표 53)을 실시하였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과 관계를 살펴보면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모두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보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차표를 토대로 신분에 따라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과 관계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chi^2=48.586$, $p=.002$ 로 나타나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63〉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과 관계

구분	신분			합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읍·면·동 주민추천제 지역	12(11.4%)	128(18.0%)	75(21.1%)	215(18.3%)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지역	60(57.1%)	407(57.1%)	182(51.1%)	649(55.3%)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지역	6(5.7%)	43(6.0%)	15(4.2%)	64(5.5%)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한 지역	27(25.7%)	130(18.2%)	78(21.9%)	235(20.0%)
기타	0(0.0%)	5(0.7%)	6(1.7%)	11(0.9%)
합계	105(100.0%)	713(100.0%)	356(100.0%)	1174(100.0%)
$\chi^2=48.586$, $p=.002^{**}$				

** $p<0.01$,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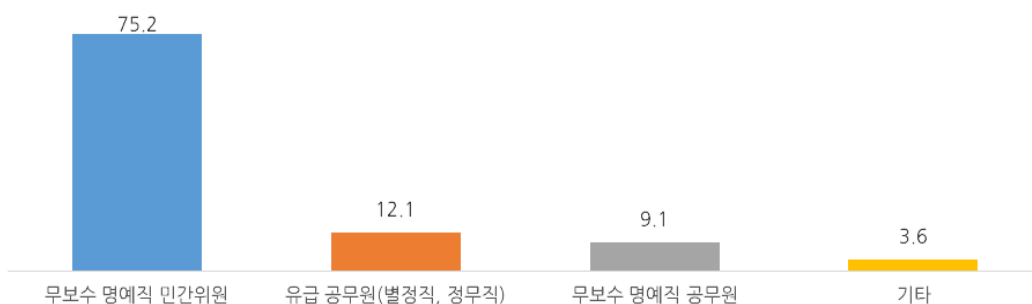


[그림 23]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과 관계

‘주민자치회 위원의 바람직한 신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무보수 명예직 민간위원’이 883명(75.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유급 공무원(별정직, 정무직)’은 142명(12.1%), ‘무보수 명예직 공무원’은 107명(9.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42명(3.6%)로 확인되었다.

〈표 64〉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 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무보수 명예직 민간위원	883	75.2%
유급 공무원(별정직, 정무직)	142	12.1%
무보수 명예직 공무원	107	9.1%
기타	42	3.6%
전체	1174	100.0%



[그림 24]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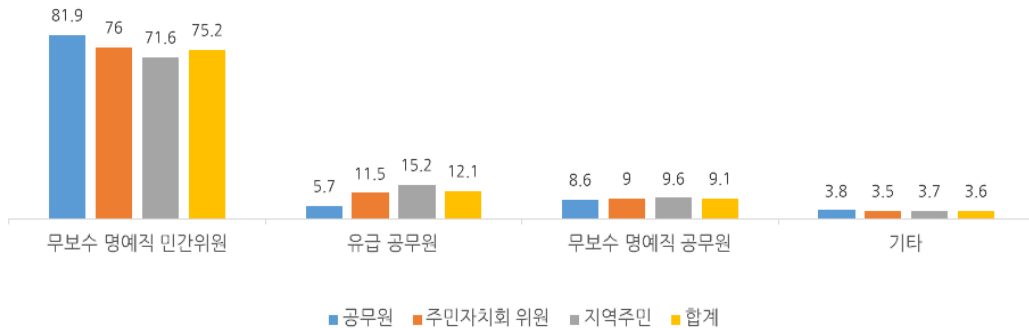
신분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과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표 55)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과 관계를 살펴보면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모두 ‘무보수 명예직 민간위원’으로 보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차표를 토대로 신분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과 관계에 대해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chi^2=7.972$, $p=.240$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5〉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과 관계

구분	신분			합계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무보수 명예직 민간위원	86(81.9%)	542(76.0%)	255(71.6%)	883(75.2%)
유급 공무원	6(5.7%)	82(11.5%)	54(15.2%)	142(12.1%)
무보수 명예직 공무원	9(8.6%)	64(9.0%)	34(9.6%)	107(9.1%)
기타	4(3.8%)	25(3.5%)	13(3.7%)	42(3.6%)
합계	105(100.0%)	713(100.0%)	356(100.0%)	1174(100.0%)
$\chi^2=7.972, p=.240$				

**p<0.0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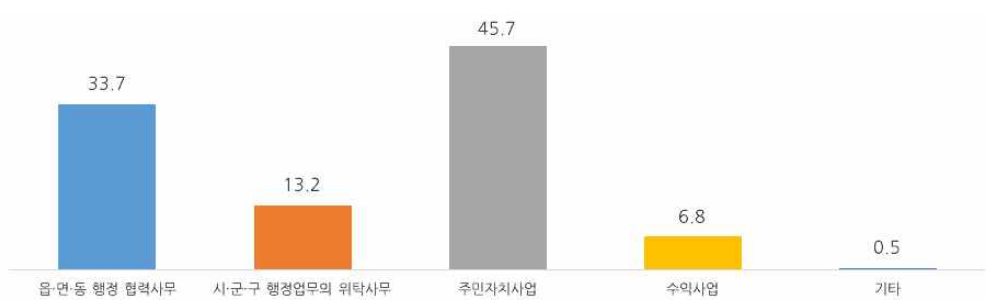


[그림 25] 주민자치회 위원 신분 인식과 관계도

‘주민자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주민자치사업’은 537명(4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읍·면·동 행정협력사무’가 396명(33.7%)로 두 번째로 높았다. ‘시·군·구 행정업무의 위탁사무’는 155명(13.2%), ‘수익사업’ 80명(6.8%), ‘기타’ 6명(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66〉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 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읍·면·동 행정협력사무	396	33.7%
시·군·구 행정업무의 위탁사무	155	13.2%
주민자치사업	537	45.7%
수익사업	80	6.8%
기타	6	0.5%
전체	1174	100.0%



[그림 26]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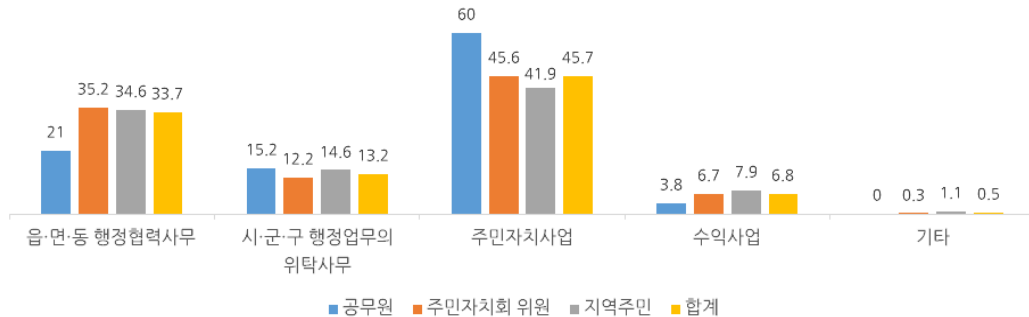
신분에 따라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과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57〉에서 보듯이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과 관계를 살펴보면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모두 ‘주민자치사업’으로 보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차표를 토대로 신분에 따라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과 관계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chi^2=18.728$, $p=.016$ 로 나타나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67〉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과 관계

구분	신분			합계
	공무원	주민자치회위원	지역주민	
읍·면·동 행정협력사무	22(21.0%)	251(35.2%)	123(34.6%)	396(33.7%)
시·군·구 행정업무의 위탁사무	16(15.2%)	87(12.2%)	52(14.6%)	155(13.2%)
주민자치사업	63(60.0%)	325(45.6%)	149(41.9%)	537(45.7%)
수익사업	4(3.8%)	48(6.7%)	28(7.9%)	80(6.8%)
기타	0(0.0%)	2(0.3%)	4(1.1%)	6(0.5%)
합계	105(100.0%)	713(100.0%)	356(100.0%)	1174(100.0%)
$\chi^2=18.728, p=.016^*$				

***p<0.0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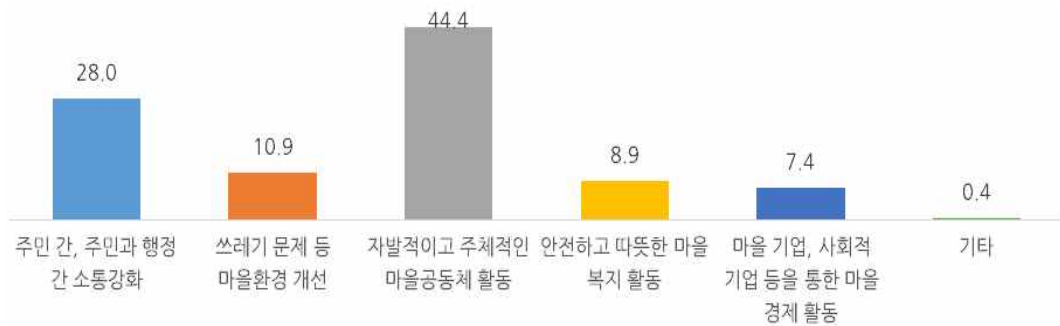


〔그림 27〕 주민자치회 역할 인식과 관계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크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에 관하여 질문 하였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521명(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두 번째로 ‘주민 간, 주민과 행정간 소통강화’가 329명(28.0%)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문제 등 마을환경 개선’ 128명(10.9%),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 복지 활동’ 104명(8.9%),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마을경제 활동’ 87명(7.4%)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기타는 5명(0.4%)로 확인되었다.

〈표 68〉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 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	329	28.0%
쓰레기 문제 등 마을환경 개선	128	10.9%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마을공동체 활동	521	44.4%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 복지 활동	104	8.9%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마을경제 활동	87	7.4%
기타	5	0.4%
전체	1174	100.0%



[그림 28]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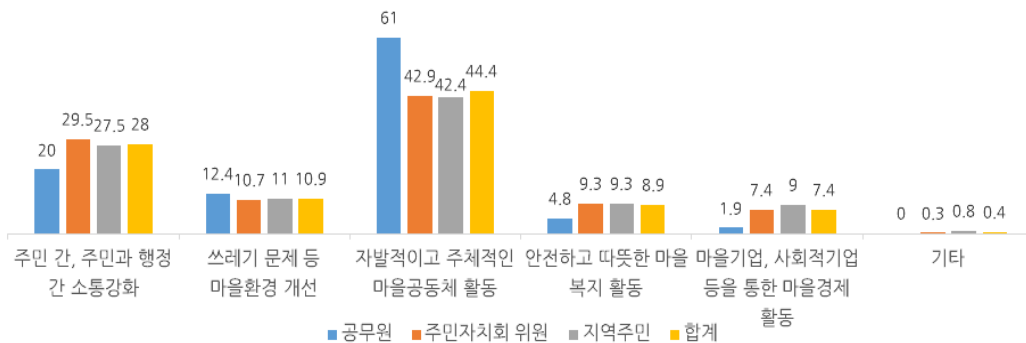
신분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과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9).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과 관계를 살펴보면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모두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보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차표를 토대로 신분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과 관계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chi^2=20.295$, $p=.027$ 로 나타나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69〉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과 관계

구분	신분			합계
	공무원	주민자치회위원	지역주민	
주민 간, 주민과행정간소통강화	21(20.0%)	210(29.5%)	98(27.5%)	329(28.0%)
쓰레기 문제 등 마을환경 개선	13(12.4%)	76(10.7%)	39(11.0%)	128(10.9%)
자발적이고주체적인마을공동체활동	64(61.0%)	306(42.9%)	151(42.4%)	521(44.4%)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복지활동	5(4.8%)	66(9.3%)	33(9.3%)	104(8.9%)
마을기업,사회적기업등을통한마을경제 활동	2(1.9%)	53(7.4%)	32(9.0%)	87(7.4%)
기타	0(0.0%)	2(0.3%)	3(0.8%)	5(0.4%)
합계	105(100.0%)	713(100.0%)	356(100.0%)	1174(100.0%)
$\chi^2=20.295$, $p=.027^*$				

***p<0.0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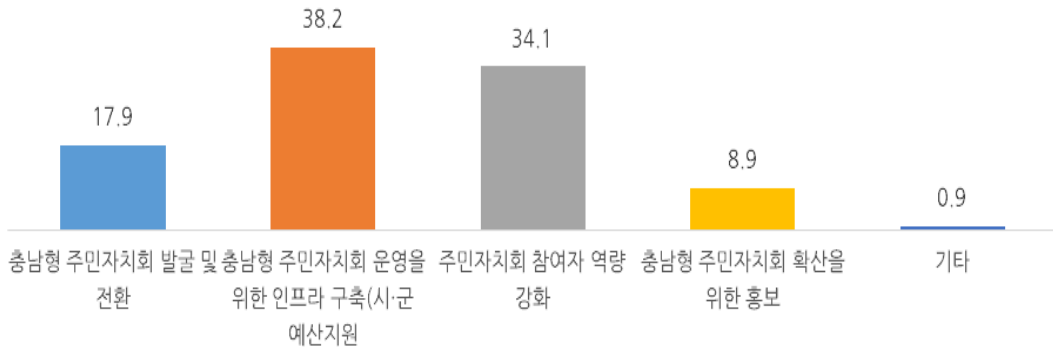


[그림 29]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인한 개선분야 인식과 관계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해 충청남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질문하였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449명(3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참여자 역량 강화’ 400명(34.0%)로 나타났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발굴 및 전환’은 210명(17.9%), 마지막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산을 위한 홍보’는 105명(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타는 10명(0.9%)으로 확인되었다.

〈표 70〉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 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충남형 주민자치회 발굴 및 전환	210	17.9%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449	38.2%
주민자치회 참여자 역량 강화	400	34.1%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산을 위한 홍보	105	8.9%
기타	10	0.9%
전체	1174	100.0%



[그림 30]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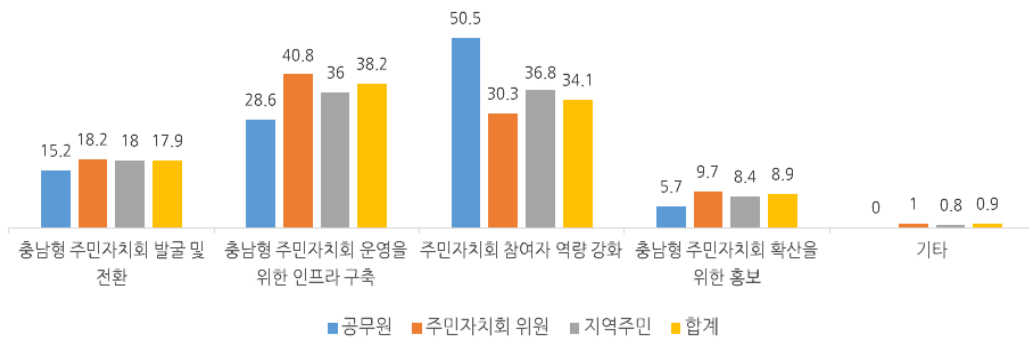
신분에 따라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과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1).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과 관계에 대하여 공무원, 지역주민의 경우 ‘주민자치회 참여자 역량 강화’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는데 반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표를 토대로 신분에 따라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과 관계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chi^2=19.600$, $p=.012$ 로 나타나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71〉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과 관계

구분	신분			합계
	공무원	주민자치회위원	지역주민	
충남형 주민자치회 발굴 및 전환	16(15.2%)	130(18.2%)	64(18.0%)	210(17.9%)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30(28.6%)	291(40.8%)	128(36.0%)	449(38.2%)
주민자치회 참여자 역량 강화	53(50.5%)	216(30.3%)	131(36.8%)	400(34.1%)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산을 위한 홍보	6(5.7%)	69(9.7%)	30(8.4%)	105(8.9%)
기타	0(0.0%)	7(1.0%)	3(0.8%)	10(0.9%)
합계	105(100.0%)	713(100.0%)	356(100.0%)	1174(100.0%)
$\chi^2=19.600, p=.012^*$				

**p<0.01, *p<0.05



[그림 31]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과 관계

3.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은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년도별 실태,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 인식 분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각 분야의 실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결과 예산지원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예산집행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초기단계에 필요한 시범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주민자치회의 육성지원이 필요하나 보조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대부분 추진되면서 사업간 연속성, 연계성 부족한 단점을 나타내고 있다.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 지원의 경우 운영초기 주민자치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의 현안이나 주민수요에 맞춘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지역문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주요 도정정책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어 대부분의 사업들이 획일화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충청남도내 주민자치회의 전환은 증가추세 이나 충남형 보다는 행안부형 주민자치회의 개소수가 많거나, 행안부형과 충남형이 혼재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개소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가져야 할 고유의 정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의 경우 사업시행 2년차에 전년도 대비 참여 주민자치회가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 역량의 부족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은 주민자치회의 사업추진 현황을 정량화하여 연차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의 역량이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매년 새롭게 구성되어 운영되는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실적이나 평가는 전환을 장려하는 양적 성장에 맞추어져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집행, 주민참여 저조 등은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계기의 전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인식 분석 결과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지원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들은 비교적 주민자치회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의 일반적 인식과

운영 인식, 성과인식 등에서 긍정적인 응답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분별(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공무원) 인식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나 인식도가 주민자치회 위원에 비해 지역주민이나 공무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읍·면·동장제가 시범실시 중인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제도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제도에 대한 인식정도, 만족도, 확대 인식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참여 부족,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 사업재원 확보의 어려움, 전담인력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정책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의 시작점이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참여자의 만족도나 이해도가 높은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비참여자와의 인식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참여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성과 공유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범사업의 추진기간은 4년간으로써 아직 그 성과나 한계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긴하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도 증가와 참여를 위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통한 시도들이 이어지면서 주민자치회 자발적인 사업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인한 우려가 있지만, 시범사업의 종료이후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한 주민자치회 운영의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4년이 경과했다. 아직 그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선부르다. 다만, 지난 4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한 34개 지역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시범사업 기간 중에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본 분석의 결과들은 주민자치회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제4장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개선방안

1. 제도적 측면

1) 중장기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계획 마련

주민자치는 탑다운 방식의 행정적 지원이나 정책추진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이루어지는 자발적 형태의 참여와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은 이러한 관점에서 도, 시군의 정책적 관심과 주민자치가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민들은 충청남도의 지원과 사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충남도의 정책의지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을 넘어서 지역내 신규 공동체의 형성과 참여를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역량은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의 광역차원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방향과 단계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운영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의 충청남도 지원사업은 대부분 2~3년 이내의 단기적 구성과 운영에 집중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광역적 차원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정책은 충남도의 지원 이후 시군의 적극적인 지속 운영 의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 광역차원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방향과 단계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계획수립에는 대표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지속가능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며, 세부적·단계적 지원계획의 수립과 강화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 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2) 주민자치회 지원 적정 성과지표 체계 마련

본 연구에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광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일부 제한된 분석지표를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양적인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주민자치회 위원 FGI에서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하지만 현황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예산의 미집행, 주민자치회 역량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으나, 그동안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은 시작과 끝만 있었고 중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이에 다양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핵심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 및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의 마련과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질적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교육, 컨설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군에서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 충남도 지원 이후 시·군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3) 지속적 예산지원과 집행의 유연성 확보

현행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충청남도의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과 재정적 지원은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확산과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보조금, 수익금, 후원금, 잡수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운영예산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 형태의 재정적 지원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단기간 도움을 줄수는 있으나, 정부, 자치단체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

앞서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 분석과정 진행된 주민자치회 위원 FGI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사업재원의 확보, 예산활용의 어려움 등을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의 문제점중 하나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다. 또한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주민자치회 지원예산의 집행을 저하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의견수렴 결과 획일화된 예산항목의 배정과 정산으로 유연한 예산집행이 어려운 점이 요인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재정집행 유연성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예산확보와 편성이 시행된다면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주민자치회별 자율성을 기반으로 예산의 지원과 활용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4) 동네자치 공동체의 지속적 발굴

충남형 주민자치가 우리지역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남도가 일방적으로 충남형 주민자치의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의 본질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의 필요성을 느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충남도는 지역 공동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이끌어 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전략은 곧 한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아파트 공동체 등 다양한 유형의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동네자치 시범공동체가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현실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충남도 정책방향에 맞춘 사업의 획일화와 단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문제의 연결점 미흡 등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로의 변화와는 동떨어진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동네자치 공동체들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지역의 주민참여 주체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동네자치 공동체들은 도내 전지역에서

구성되지 않고 구성된 공동체들의 활동내용 또한 다양하다. 이들의 주된 활동범위는 주민 자치회 구성 범위보다 작을 수 있으며, 다양한 공동체들의 협력은 주민자치회로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충남도는 이러한 단체들의 사업과 운영에 개입하거나 규제하려 하지 말고 허용하는 수준에서 최대한 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과 활동들이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민계층에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운영적 측면

1) 도, 시·군 협력강화

주민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충남도 차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정책과 사업추진은 유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주민자치회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충남도의 지원 이후 시·군의 적극적인 지속 운영 의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는 경우 충남형에서 시·군 특화형(천안형, 당진형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 주민자치회의 운영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만 추진이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시범사업 종료 후 주민자치회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충남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충청남도의 지원사업 이후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충청남도과 각 시·군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시켜 나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청남도의 지원이후 다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초기형태의 시·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 충남도의 역할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 시·군의 역할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하여 자치분권을 확립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주민자치 지원사업에 대한 도, 시·군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장기적 관점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행정적 단위에서의 지원이 아닌 도, 시·군협력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면서 과정과 운영에 중복성을 피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지원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제도화 마련 등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화형 의제발굴을 통한 상향식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회 운영 등 도, 시·군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적 관계가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도, 시·군의 협력은 주민자치회 지원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며, 세부적·단계적 지원계획의 수립과 강화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 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반구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주민자치회 중간지원 조직의 운영 및 활용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실태 분석 기준으로 선정한 항목중의 하나가 주민자치회의 상근 인력 근무 여부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FGI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근 인력의 근무와 이를 위한 수당의 지급의 필요성 의견이 나타났다. 지역내에서 비교적 활성화된 주민자치회는 상근인력의 사업 추진이나 사무처리 능력이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고령화되어 있어 행정처리에 미숙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보조금 정산 등 행정업무나 사업구상에 상근인력을 중심으로 사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주민자치기구라는 점에서는 이러한 상근인력의 필요성은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지난 몇 년간 급격한 양적 성장은 이루고 있으나, 주민참여와 자치의 실현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초기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본다면 상근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은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이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운영의 미흡, 사업추진의 연속성 측면에서 상근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지원 조직을 활용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민중심의 상향식 자치기구로써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중간지원 조직이 활용된다면 주민자치회간 역량 편차를 줄이고 사업추진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회별로 보조금에서 지출중인 상근인력의 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급하고, 주민자치회는 관련 예산을 사업비,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

3) 주민자치회 지역사례에 대한 공유 플랫폼 운영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는 주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에서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주민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행사 개최, 사례집 발간 등의 정책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운영역량은 지원기간 동안 하락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운영실태와 인식의 결과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사례에 대한 전파와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사업 추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비 참여 주민과의 소통이 없다면,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위축될 수 있다. 이에 주민자치 컨설팅, 교육, 추진사업 등 다양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가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 우수사례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및 공유를 통한 학습 기능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내에는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타 단체와의 인식, 제도 등에 대한 교류와 협력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읍·면·동 단위 통계와 정보공유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향후 장기적으로는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과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4)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지역주민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참여 주체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부족과 공동체의식의 결여 등의 문제점은 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들의 역량부족에서 일부 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인식조사 결과, 주민자치회 위원 FGI에서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교육프로그램이 획일화 되어있고, 동일한 내용의 지속적 반복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전반의 문제점 및 보완요구 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교육은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인식의 강화, 변화등을 통해 공무원과 주민 간의 협력이 증가하고 협력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민자치 본연의 역할들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전의 기본적인 교육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의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실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주민자치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관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에 주민자치 교육 과정의 위탁을 통한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력 제고와 교육의 다변화를 추진할 시점이다. 주민자치회의 위원 및 주민자치회 조직의 역량을 가늠하고 그룹에 따른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충남형 주민자치의 현황 파악과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예산지원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예산 집행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주민자치회의 육성지원이 필요하나 보조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대부분 추진되면서 사업간 연속성, 연계성 부족한 단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획일화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의 역량이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발전방향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인식 분석결과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인식은 비교적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분별(주민자치회 위원, 지역주민, 공무원) 인식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의 시작점이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참여자의 만족도나 이해도가 높은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비참여자와의 인식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참여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성과 공유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충청남도의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부분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계획의 변화, 주민자치회 적정 성과지표 체계 마련, 지속적 예산지원과 집행의 유연성 확보, 동네자치 공동체의 지속적 발굴을 제안하였으며, 운영적 측면에서는 도, 시·군 협력강화, 중간지원 조직의 운영과 활용, 사례 공유 플랫폼 운영,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발전이나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앞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하고 시범실시에서 전면실시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도의 변화방향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소모적인 논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에 충청남도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제도 도입과 시행착오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아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어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실태분석 과정에서 정량적 분석을 위해 추진된 조사표 조사는 충남도에서 기본안을 가지고 있는 평가표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광역차원의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지표의 설정 또한 충남도 사업의 성격에 맞게 구성되어 일반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인식조사 분석에서 활용된 설문조사는 인구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도시와 농어촌 등지역 간에 구조적인 차이점을 간과하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 사업과 성과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규명하고 다양한 요인적 측면을 고려한 지역별 주민자치 지원 사업의 성과와 만족감에 대한 관계자와 지역주민의 효과와 만족도 등 체감도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는 보다 면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현근(2015).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49(3).
- 구아영(2019).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안. 서울연구원.
- 김상민(2016). 주민자치와 협력적 마을만들기: 협력적 마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 지방자치학회보 28(1).
- 김수람 외(2019).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지역미래연구원
- 김찬동(2014). 주민자치회 제도의 향후 방향. 「지방행정연구」, 28(3): 25-37.
- 김필두 외(2017).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2013).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201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28(3): 35-60.
- 김홍주(201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 전세종연구원
- 김홍주(2018).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세종특별자치시.
- 문상덕(2017).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행정법연구』 48호, 1-28.
- 박영득, 정화옥, 정수현(2019). 지방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조직 개선방안: 표적 집단면접(FGI)을 통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43(2)
- 신미애(2018).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9(6)
- 신윤창·손진아(2017).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협력형 모델의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1(4): 93-116
- 심익섭(2012).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6(4): 57-73.
- 안철현(2017).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기관구성과 주민자치회 조직 형태.” 『21세기정치학회보』 27집 3호, 31-53.
- 오수길(2014).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수단과 체계 분석: 지역 활성화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NGO 연구』 9(1), 111-140.
- 유수동, 전성훈(2017). 주민자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1(3)

- 윤영근(2018). 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이병렬·이종수(201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과제.” 『한국자치 행정 학보』 29권 1호, 157-180.
- 이정석(2015).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진단시트’의 도입 및 활용 방안. 『지방정부연구』 19(3), 411-435.
- 최근열(2014).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및 발전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215-240.
- 최상현(2014).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 월간주민자치 37.
- 최상현(2016).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5(1).
- 최인수 외(20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집 필 자 ■

연구책임 장창석 충남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진 임다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22-23 ·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글쓴이 · 장창석 · 임다정

발행자 · 유동훈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2년 12월 31일 / 발행 · 2022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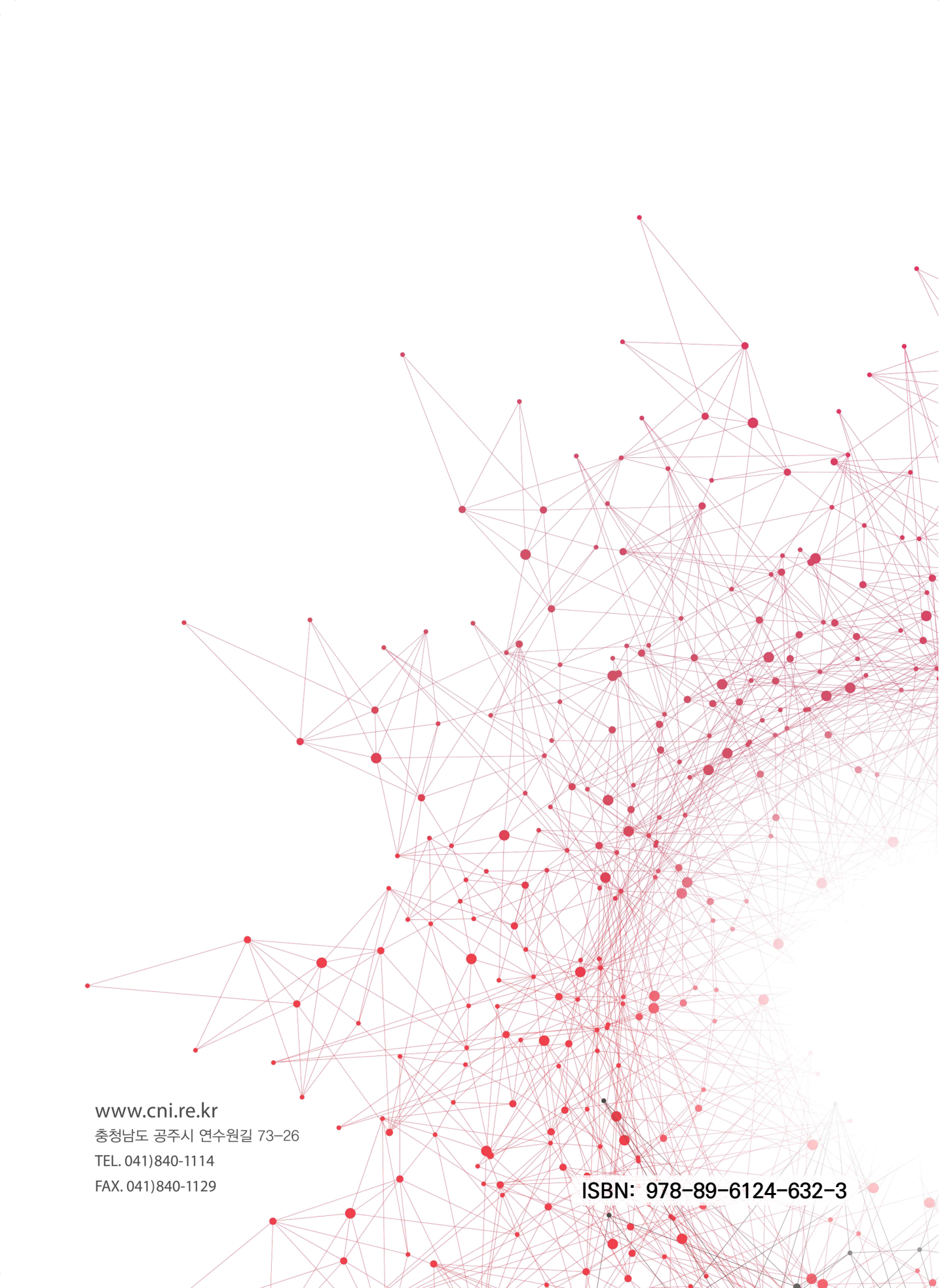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632-3

<http://www.cni.re.kr>

© 2022.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An abstract graphic of a network or web structure, composed of numerous red dots of varying sizes connected by thin red lines. The network is dense and complex, with many nodes and edges, creating a web-like pattern that fills the right side of the page. The dots are of different sizes, with some being significantly larger than others, and the lines are thin and light red.

www.cni.re.kr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ISBN: 978-89-6124-632-3